

01 정치와 법

수능 기본	문제	01 ②	02 ③	03 ④	04 ②	05 ②	본문 11~12쪽
		06 ②	07 ⑤	08 ④			
수능 실전	문제	1 ①	2 ④	3 ③	4 ②	5 ⑤	본문 13~16쪽
		6 ④	7 ⑤	8 ①			
기출 플러스		1 ②	2 ①				본문 17쪽

02 헌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

수능 기본	문제	01 ③	02 ③	03 ④	04 ②	05 ①	본문 20~21쪽
		06 ④	07 ①	08 ②			
수능 실전	문제	1 ②	2 ②	3 ①	4 ④	5 ④	본문 22~24쪽
		6 ⑤					
기출 플러스		1 ④	2 ③				본문 25쪽

03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수능 기본	문제	01 ②	02 ③	03 ①	04 ②	05 ⑤	본문 29~30쪽
		06 ④	07 ③	08 ④			
수능 실전	문제	1 ④	2 ⑤	3 ③	4 ④	5 ①	본문 31~34쪽
		6 ⑤	7 ①	8 ④			
기출 플러스		1 ④	2 ①				본문 35쪽

04 정부 형태

수능 기본	문제	01 ④	02 ③	03 ④	04 ⑤	본문 38쪽	
수능 실전	문제	1 ④	2 ④	3 ④	4 ②	5 ②	본문 39~41쪽
		6 ③					
기출 플러스		1 ⑤					본문 42쪽

05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

수능 기본	문제	01 ⑤	02 ③	03 ⑤	04 ③	05 ①	본문 47~48쪽
		06 ③	07 ③	08 ②			
수능 실전	문제	1 ④	2 ②	3 ③	4 ①	5 ⑤	본문 49~52쪽
		6 ③	7 ③	8 ④			
기출 플러스		1 ③	2 ③	3 ②	4 ④		본문 53~54쪽

06 지방 자치

수능 기본	문제	01 ②	02 ④	03 ①	04 ④	본문 57쪽
수능 실전	문제	1 ②	2 ②	3 ④	4 ③	본문 58~59쪽
기출 플러스		1 ②	2 ④			본문 60쪽

07 선거와 선거 제도

수능 기본	문제	01 ⑤	02 ①	03 ④	04 ⑤	05 ③	본문 64~65쪽
		06 ①	07 ②	08 ④			
수능 실전	문제	1 ①	2 ④	3 ④	4 ②	5 ⑤	본문 66~71쪽
		6 ②	7 ④	8 ⑤			
기출 플러스		1 ⑤	2 ⑤				본문 72~73쪽

08 정치 과정과 정치 참여

수능 기본	문제	01 ④	02 ④	03 ③	04 ④	본문 78쪽	
수능 실전	문제	1 ③	2 ②	3 ④	4 ④	5 ④	본문 79~82쪽
		6 ③	7 ②	8 ④			
기출 플러스		1 ⑤	2 ④				본문 83쪽

09 민법의 기초

수능 기본	문제	01 ⑤ 02 ④ 03 ③ 04 ② 05 ④ 06 ① 07 ② 08 ⑤	본문 86~87쪽
수능 실전	문제	1 ③ 2 ④ 3 ③ 4 ③ 5 ③ 6 ③	본문 88~90쪽
기출 플러스		1 ③ 2 ①	본문 91쪽

10 재산 관계와 법

수능 기본	문제	01 ① 02 ③ 03 ⑤ 04 ② 05 ① 06 ④ 07 ④ 08 ③	본문 96~97쪽
수능 실전	문제	1 ② 2 ① 3 ⑤ 4 ⑤ 5 ④ 6 ② 7 ⑤ 8 ①	본문 98~101쪽
기출 플러스		1 ② 2 ④ 3 ① 4 ③	본문 102~103쪽

11 가족 관계와 법

수능 기본	문제	01 ⑤ 02 ③ 03 ⑤ 04 ① 05 ① 06 ② 07 ⑤ 08 ④	본문 108~109쪽
수능 실전	문제	1 ③ 2 ⑤ 3 ③ 4 ① 5 ③ 6 ④ 7 ③ 8 ⑤	본문 110~113쪽
기출 플러스		1 ④ 2 ③ 3 ④ 4 ②	본문 114~115쪽

12 형법의 이해

수능 기본	문제	01 ④ 02 ② 03 ④ 04 ③ 05 ③ 06 ④ 07 ② 08 ⑤	본문 120~121쪽
수능 실전	문제	1 ② 2 ③ 3 ⑤ 4 ⑤ 5 ③ 6 ⑤ 7 ④ 8 ④	본문 122~125쪽
기출 플러스		1 ② 2 ④	본문 126쪽

13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수능 기본	문제	01 ④ 02 ④ 03 ⑤ 04 ③ 05 ④ 06 ① 07 ④ 08 ④	본문 131~132쪽
수능 실전	문제	1 ③ 2 ③ 3 ④ 4 ② 5 ④ 6 ② 7 ② 8 ⑤	본문 133~136쪽
기출 플러스		1 ② 2 ③ 3 ④ 4 ③	본문 137~138쪽

14 근로자의 권리

수능 기본	문제	01 ② 02 ④ 03 ③ 04 ② 05 ③ 06 ⑤ 07 ② 08 ⑤	본문 141~142쪽
수능 실전	문제	1 ③ 2 ① 3 ⑤ 4 ③ 5 ③ 6 ③	본문 143~145쪽
기출 플러스		1 ③ 2 ⑤	본문 146쪽

15 국제 관계와 국제법

수능 기본	문제	01 ⑤ 02 ② 03 ④ 04 ①	본문 150쪽
수능 실전	문제	1 ① 2 ③ 3 ⑤ 4 ② 5 ① 6 ④	본문 151~153쪽
기출 플러스		1 ① 2 ②	본문 154쪽

16 국제 문제와 국제기구

수능 기본	문제	01 ① 02 ⑤ 03 ③ 04 ①	본문 157쪽
수능 실전	문제	1 ② 2 ④ 3 ③ 4 ③	본문 158~159쪽
기출 플러스		1 ⑤ 2 ②	본문 160쪽

01 정치와 법

수능 기본 문제

본문 11~12쪽

01 ② 02 ③ 03 ④ 04 ② 05 ② 06 ②
07 ⑤ 08 ④

01 정치의 기능 이해

(문제분석) 갑은 국가를 통해 사회권을 보장받게 되었고, 을은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자유권을 보장받게 되었다.

(정답 찾기) ② 제시된 두 사례를 통해서 정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는 것은 정치의 기능에 해당하지만, 제시된 사례를 통해서 도출할 수 없다.

③ 집단 간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는 것은 정치의 기능에 해당하지만, 제시된 사례를 통해서 도출할 수 없다.

④ 공권력의 행사로 반사회적 행위를 통제한다는 것은 정치의 기능에 해당하지만, 제시된 사례를 통해서 도출할 수 없다.

⑤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정부 권한을 통제하는 것은 정치의 기능에 해당하지만, 제시된 사례를 통해서 도출할 수 없다.

02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문제분석) A는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고, B는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정답 찾기) ③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집단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정치로 보므로,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비해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가 다양하다고 본다.

(오답 피하기) ①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②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④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모두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한 통치 기구인 국가가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을 정치라고 본다.

⑤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정치권력을 획득, 유지, 행사하는 국가의 고유한 활동만을 정치로 보므로, 회사 이윤 배분 방식에 대한 주주 총회의 논의 과정을 정치로 보지 않는다.

03 법치주의의 유형 이해

(문제분석)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의 목적이나 내용에 관계없이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하므로 A는 형식적 법치주의이다. 따라서

B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정답 찾기) ㄴ. 실질적 법치주의는 통치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그 법의 목적이나 내용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정의에 부합하는 실질적 정당성도 중시한다.

ㄷ.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오답 피하기) ㄱ. 형식적 법치주의는 통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법에 구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ㄴ. 실질적 법치주의는 위헌 법률 심사제 도입에 찬성할 것이다.

04 법의 이념 이해

(문제분석) A는 정의, B는 법적 안정성이다.

(정답 찾기) ② 정의는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우할 것과 개인의 능력과 상황, 필요 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대우할 것을 요구한다.

(오답 피하기) ① 법이 해당 시대나 국가가 지향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은 합목적성이다.

③ 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는 정의이다.

④ 법적 안정성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법의 내용이 명확하고 실현 가능해야 하며, 국민의 법의식과 합치되어야 한다.

⑤ 정의와 법적 안정성의 구체적 내용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르다.

05 시민 혁명의 한계 이해

(문제분석) 근대 시민 혁명은 근대 민주주의가 등장하게 된 계기가 되었지만, 그 한계도 존재하였다. (가)에는 시민 혁명의 한계가 들어가야 한다.

(정답 찾기) ② 근대 민주주의에서는 재산, 인종, 성별 등에 따른 참정권이 제한되거나 차등 부여되었다.

(오답 피하기) ① 시민 혁명의 결과 국민 주권과 권력 분립 등을 기반을 둔 대의 민주제가 성립되었다.

③ 시민 혁명의 결과 국민 주권주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가 등장하였다.

④ 시민 혁명의 결과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통치자에 의한 전제 정치가 실시된 것은 아니다.

⑤ 여성, 노예 등이 시민에서 배제된 제한적 직접 민주 정치가 실시된 것은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이다.

06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문제분석) 을이 정치는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행사하는 것과 관련된 국가 고유의 활동이라고 하였으므로 (가)에는 국가 이외의 사회 집단 활동이 들어가야 한다.

정답 찾기 ㄱ, ㄷ. 학급 자치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학급 회의나 지방 의회에 청원할 의견을 모으기 위한 주민 자치 회의 모두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해당하는 사례이므로 (가)에 들어갈 수 있다.

오답 피하기 ㄴ, ㄹ. ○○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국무 회의의 심의와 법률 개정을 위한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 과정 모두 국가의 활동이므로 (가)에 들어갈 수 없다.

07 법치주의의 유형 이해

문제 분석 A는 형식적 법치주의, B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정답 찾기 ⑤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의회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제정된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오답 피하기 ①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권력자의 자의적 지배를 방지하고자 한다.

- ② 실질적 법치주의는 부당한 국가 권력에 대한 저항권을 인정한다.
- ③ 합법적 독재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이다.
- ④ 실질적 법치주의는 위헌 법률 심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08 사회 계약론의 이해

문제 분석 갑은 로크, 을은 루소이다.

정답 찾기 ④ 로크는 대의제를 바탕으로 한 국가 권력이 집행권과 행정권으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2권 분립을 주장하였다. 반면, 루소는 주권은 대표될 수 없다고 하여 일반 의지에 따라 공적 의사 결정에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자기 보존 욕구, 경쟁심, 명예에 대한 갈망 등과 같은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본 사회 계약론자는 홉스이다.

- ②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경우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사회 계약론자는 로크이다.
- ③ 근대 사회 계약론자는 모두 국가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보았다.
- ⑤ 통치자가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전제 정치를 주장한 사회 계약론자는 홉스이다.

수능 실전 문제

본문 13~16쪽

- | | | | | | |
|-----|-----|-----|-----|-----|-----|
| 1 ① | 2 ④ | 3 ③ | 4 ② | 5 ⑤ | 6 ④ |
| 7 ⑤ | 8 ① | | | | |

1 법치주의의 유형 이해

문제 분석 A는 형식적 법치주의, B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정답 찾기 ① 형식적 법치주의는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이라는 목적을 상실한 채 통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②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률보다 헌법이 우위에 있음을 강조한다.

③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국가 권력이 의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 행사되어야 한다고 본다.

④ 실질적 법치주의는 위헌 법률 심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⑤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부합할 때 국가 권력이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이다.

2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문제 분석 갑은 모든 사회 집단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하고 이 해관계를 조정해 가는 과정을 정치로 보기 때문에 정치를 넓은 의미에서 바라보고 있다. 을은 국가 차원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현상을 정치로 보기 때문에 정치를 좁은 의미에서 바라보고 있다.

정답 찾기 ④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비해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사회적 희소가치에 대한 자원 배분의 주체가 다양하다고 본다.

오답 피하기 ①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모든 사회 집단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는 과정을 정치로 보기 때문에 노동조합 내에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정치로 본다.

②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국가 성립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③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모두 반사회적 행위를 통제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정치의 기능으로 본다.

⑤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국가의 정치 현상과 사회 집단의 정치 현상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보지만,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국가의 정치 현상과 국가 이외의 사회 집단의 정치 현상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3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의 이해

문제 분석 A는 평균적 정의, B는 배분적 정의이다.

정답 찾기 ㄱ. 상습적으로 절도 행위를 한 자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것은 일반 절도 범죄 행위를 한 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이므로 배분적 정의의 사례에 해당한다.

ㄴ. 공직 선거 시 모든 유권자에게 1인 1표의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이므로 평균적 정의의 사례에 해당한다.

ㄷ. 무단 횡단을 한 사람들에게 동일한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같은 행위를 한 자들에 대해 동일한 제재를 가한 것이므로 평균적 정의의 사례에 해당한다.

ㄹ.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시 일반 수험생보다 시각 장애 수험생에게 시간을 더 부여하는 것은 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것이므로 배분적 정의의 사례에 해당한다.

4 정치의 기능 이해

문제 분석 제시문을 통해서 정치가 다양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갈등을 해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② 제시문을 통해서 정치가 서로 다른 공동체 구성원 간 발생한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사회 구성원의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정치의 기능에 해당하지만, 제시문을 통해서 파악할 수 없다.

③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정치의 기능에 해당하지만, 제시문을 통해서 파악할 수 없다.

④ 사회 구성원에게 기대되는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은 정치의 기능에 해당하지만, 제시문을 통해서 파악할 수 없다.

⑤ 공동체의 장기적 목표를 설정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정치의 기능에 해당하지만, 제시문을 통해서 파악할 수 없다.

5 사회 계약론의 이해

문제 분석 자기 보존 욕구, 경쟁심, 명예에 대한 갈망 등과 같은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본 사회 계약론자는 홉스이다.

정답 찾기 ⑤ 홉스는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보았다.

오답 피하기 ① 주권은 대표될 수 없다고 본 사회 계약론자는 루소이다.

② 일반 의지에 따라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고 본 사회 계약론자는 루소이다.

③ 사회 계약 이후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 주권론을 주장한 사회 계약론자는 로크와 루소이다.

④ 홉스는 국가 운영 방식으로 민주적 선거에 기반을 둔 대의제를 옹호하지 않았다.

6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문제 분석 좁은 정치를 좁은 의미로 바라보며, 넓은 정치를 넓은 의미로 바라본다. 정치를 좁은 의미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국가 이외의 사회 집단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정치로 보지 않으므로 (가)에는 국가의 활동이 들어가야 하고, (나)에는 국가 이외의 사회 집단 활동이 들어가야 한다.

정답 찾기 ④ (가)에는 국가의 활동이 들어가야 하므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오답 피하기 ① 정치를 좁은 의미로 바라보는 관점은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② 정치를 넓은 의미로 바라보는 관점은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활동을 정치로 보므로 국가 형성 이전에 나타난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③ 정치를 좁은 의미로 바라보는 관점, 정치를 넓은 의미로 바라보는 관점 모두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한 통치 기구인 국가가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을 정치라고 본다.

⑤ (나)에는 국가 이외의 사회 집단의 활동이 들어가야 하므로 해당 내용은 (나)에 들어갈 수 없다.

7 법치주의의 유형 이해

문제 분석 A는 형식적 법치주의, B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정답 찾기 ㄴ.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의 이념에 부합해야 하는 것을 요구한다.

ㄷ. 역사적으로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발전되었다.

ㄹ.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본다.

오답 피하기 ㄱ.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통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법에 구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8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 이해

문제 분석 입헌주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은 근대 민주주의와 현대 민주주의이므로 C는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이다. 보통 선거 제도가 확립된 것은 현대 민주주의이므로 B는 현대 민주주의이다. 따라서 A는 근대 민주주의이다.

정답 찾기 ①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는 여성, 노예, 외국인 등을 시민에서 배제하여 정치 참여에 제한을 두었으며, 근대 민주주의에서는 재산, 인종, 성별 등에 따라 참정권에 제한을 두었다. 반면, 현대 민주주의는 정치 참여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 ㉡은 모두 '예', ㉢은 '아니요'이다.

오답 피하기 ② 근대 민주주의, 현대 민주주의 모두 국민 주권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 ③ 근대 민주주의는 국민 주권과 권력 분립 등에 기반을 둔 대의 민주제를 기반으로 한다.
- ④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한 기본권인 사회권이 확립된 것은 현대 민주주의이다.
- ⑤ 국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한 권력 분립의 원칙에 기초하는 것은 근대 민주주의와 현대 민주주의이다. 따라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기출 플러스

본문 17쪽

1 ② 2 ①

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문제 분석) 정치 현상을 국가의 고유한 활동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한 A는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며, 국가를 포함한 모든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정치라고 본 B는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정답 찾기) ②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정치가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난다고 보므로 다양한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오답 피하기) ①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③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모두 국가의 활동을 정치로 본다. 따라서 두 관점 모두 정부의 재해 복구 지원금 집행을 정치로 본다.

④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정치가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행사하는 과정과 관련된 국가 고유의 활동만으로 한정하므로, 다른 사회 집단의 활동과 구별되는 국가 활동의 특수성을 인정한다.

⑤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정치를 국가 고유의 활동만으로 한정하므로, 학급 구성원이 체육 대회 단체복 디자인을 결정하는 활동을 정치로 보지 않는다.

2 법치주의의 유형 이해

(문제 분석)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제정된 법률이라면 그 목적이나 내용에 상관없이 지켜져야 한다는 A는 형식적 법치주의이다. 형식적인 원칙과 함께 자연법, 인권과 같은 실질적 내용까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B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정답 찾기) ① 형식적 법치주의는 행정 작용뿐 아니라 사법 작용도 법률에 구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오답 피하기) ② 실질적 법치주의는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③ 실질적 법치주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부합하는 경우라도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국가 권력 행사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본다.

④ 실질적 법치주의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위헌 법률 심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⑤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부합해야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이 가능해진다고 보므로 입법자의 자의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반면,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률의 실제적 내용이 아닌 통치자의 합법성만을 강조해 입법자에 의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

02 헌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

수능 기본 문제

본문 20~21쪽

01 ③ 02 ③ 03 ④ 04 ② 05 ① 06 ④
07 ① 08 ②

01 헌법의 의미 이해

(문제 분석) A는 헌법이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기관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가를 정한 국가의 최고법이다.

(정답 찾기) 나. 헌법은 국가 성립에 필요한 국민의 자격, 영토의 범위, 국가 권력의 소재와 행사 절차 등을 규정한다.

다. 헌법은 국가 권력을 분립시킴으로써 국가 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한다.

(오답 피하기) 가. 헌법은 법률보다 우위의 효력을 지닌다.

르. 헌법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02 헌법의 기능 이해

(문제 분석) 제시문을 통해서 헌법이 국가 통치 조직을 구성하고 각 조직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정답 찾기) ③ 입법, 행정, 사법의 권한이 각각 국회, 정부, 법원에 속한다는 것을 통해 헌법이 국가 통치 기구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②, ④, ⑤ 제시문을 통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 규정, 최고 규범으로서의 기능 수행, 정치 사회화 역할, 사회 통합의 유지와 같은 헌법의 기능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03 헌법의 의미 변천 이해

(문제 분석) A는 현대 복지 국가 헌법, B는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다.

(정답 찾기) ④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은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오답 피하기) ①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질서 유지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다.

② 근대 입헌주의 헌법, 현대 복지 국가 헌법 모두 국가 통치 기관을 조직하고 구성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③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은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등장하였다.

⑤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강조한 것은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이다.

04 문화 국가의 원리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글에서 부각되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는 문화 국가의 원리이다.

(정답 찾기) ② 문화 국가의 원리는 국가가 문화를 보호하고 개인의 문화적 자유와 자율을 보장함으로써 문화의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는 원리이므로, 국가가 국민의 자율적인 문화 활동을 보장하는 근거가 된다.

(오답 피하기) ① 남북 분단 상황을 반영한 우리나라 헌법 특유의 원리는 평화 통일 지향이다.

③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을 강조하는 것은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④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권력이 국민에게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원리는 국민 주권주의이다.

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반드시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의 실현 방안이다.

05 국민 주권주의의 이해

(문제 분석) A는 국민 주권주의이다. 국민 주권주의는 국가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최고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다.

(정답 찾기) ① 국민 투표제를 실시하는 것은 국민 주권주의의 실현 방안 중 하나이다.

(오답 피하기) ② 최저 임금제를 시행하는 것은 복지 국가의 원리 실현 방안 중 하나이다.

③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노력한다는 것은 문화 국가의 원리 실현 방안 중 하나이다.

④ 민주 평화 통일 자문 회의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은 평화 통일 지향 실현 방안 중 하나이다.

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는 것은 국제 평화주의의 실현 방안 중 하나이다.

06 문화 국가의 원리 이해

(문제 분석) 문화생활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의무 교육 제도의 시행은 모두 문화 국가의 원리 실현 방안에 해당한다.

(정답 찾기) ④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화 국가의 원리가 반영된 헌법 조항이다.

(오답 피하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는 자유 민주주의가 반영된 헌법 조항이다.

②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는 국민 주권주의가 반영된 헌법 조항이다.

③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는 국제 평화주의가 반영된 헌법 조항이다.

⑤ ‘근로자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는 복지 국가의 원리가 반영된 헌법 조항이다.

07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

[문제 분석] A는 국제 평화주의, B는 국민 주권주의이다.

[정답 찾기] ① 국제 평화주의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는 근거가 된다.

[오답 피하기] ②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는 원리는 자유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 지향이다.

③ 국가가 적절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④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복지 국가의 원리와 관련된 헌법 조항이다. 따라서 해당 헌법 조항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⑤ ‘침략적 전쟁의 부인’은 국제 평화주의 실현 방안이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나)에 들어갈 수 없다.

08 복지 국가의 원리 이해

[문제 분석] 두 헌법 조항에서 공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정답 찾기] ② 복지 국가의 원리는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오답 피하기] ① 국제법을 존중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근거가 되는 원리는 국제 평화주의이다.

③ 헌법 개정 시 필수적으로 국민 투표를 거쳐야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국민 주권주의이다.

④ 대통령에게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평화 통일 지향이다.

⑤ 국가가 문화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문화생활을 위한 조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원리는 문화 국가의 원리이다.

수능 실전 문제

본문 22~24쪽

1 ② 2 ② 3 ① 4 ④ 5 ④ 6 ⑤

1 헌법의 의미 변천 이해

[문제 분석] A는 고유한 의미의 헌법, B는 근대 입헌주의 헌법, C는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이다.

[정답 찾기] ②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고유한 의미의 헌법에서 더 나아가 자유권을 중심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제한한다.

[오답 피하기] ① 근대 시민 혁명 결과 등장한 헌법은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다.

③ 재산권의 불가침성을 강조한 헌법은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다.

④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헌법은 사회권 보장을 통해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이다.

⑤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헌법은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이다.

2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

[문제 분석] A는 자유 민주주의, B는 국제 평화주의, C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정답 찾기] ② 우리나라는 국제 평화주의에 따라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오답 피하기] ① 빈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경제 규제 정책의 근거가 되는 것은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③ 국가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최고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는 국민 주권주의이다.

④ 복지 국가의 원리는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서부터 강조된 원리이다.

⑤ (가)에는 복지 국가의 원리 실현 방안이 들어가야 한다. 복수 정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 실현 방안 중 하나이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3 자유 민주주의와 복지 국가의 원리 이해

[문제 분석] A는 자유 민주주의, B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정답 찾기] ① 자유 민주주의는 민주적으로 구성된 정부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것으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 원리이다.

[오답 피하기] ② 복지 국가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는 사회 보장·사회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복지 국가의 원리는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서부터 강조된 원리이다.
- ④ 헌법의 기본 원리는 모두 국가 기관을 구성·운영하면서 추구해야 할 내용이며, 헌법의 개별 조항이나 법령을 해석할 때 기준이 된다.
- ⑤ 권력 분립 제도는 자유 민주주의의 실현 방안 중 하나이다.

4 복지 국가의 원리와 평화 통일 지향의 이해

[문제 분석] A는 복지 국가의 원리, B는 평화 통일 지향이다.

[정답 찾기] ④ 국제 평화 유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국제 평화주의의 실현 방안 중 하나이므로 복지 국가의 원리 실현 방안에 대한 틀린 내용이 된다. 채점 결과가 1점이므로 (가)에는 복지 국가의 원리 실현 방안이 들어가야 한다. 최저 임금제 실시는 복지 국가의 원리 실현 방안 중 하나이므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국제 평화주의에 따라 우리나라는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국제 평화주의이다.

③ 복지 국가의 원리는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서부터 강조된 원리이다.

⑤ 평화 통일을 위하여 남북 간 문화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는 것은 평화 통일 지향의 실현 방안 중 하나이므로, 평화 통일 지향의 실현 방안에 대한 옳은 내용이 된다. 채점 결과가 1점이므로 (나)에는 평화 통일 지향의 실현 방안에 대한 틀린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국가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문화 국가의 원리 실현 방안 중 하나이므로 해당 내용은 (나)에 들어갈 수 있다.

5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

[문제 분석] 적절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 규제 정책의 근거가 되는 원리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며, 국제 질서를 존중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의 번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리는 국제 평화주의이다.

[정답 찾기] 가. ㉠이 같이라면, A는 국제 평화주의이다. 침략적 전쟁의 부인 및 국제 평화 유지 활동 참여는 국제 평화주의의 실현 방안 중 하나이다.

나. 국민의 사회권 보장을 통한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강조하는 원리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해당 내용이 (가)에 들어가면, 갑, 병 두 학생이 복지 국가의 원리에 대해 발표하였으므로 A는 복지 국가의 원리가 된다. 복지 국가의 원리는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서부터 강조된 원리이다.

다. 상호주의에 따른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는 것은 국제 평화주의 실현 방안 중 하나이다. (가)에 해당 내용이 들어가면, 을, 병 두 학생이 국제 평화주의에 대해 발표하였으므로 A는 국제 평

화주의가 되며, B는 복지 국가의 원리가 된다. 복지 국가의 원리는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오답 피하기] 나. ㉡이 같이라면, A는 복지 국가의 원리, B는 국제 평화주의이다.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리는 자유 민주주의이다.

6 자유 민주주의의 이해

[문제 분석] A는 자유 민주주의이다.

[정답 찾기] ⑤ 자유 민주주의는 민주적으로 구성된 정부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것으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 원리이다.

[오답 피하기] ① 복지 국가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경제적 규제의 근거가 되는 원리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② 분단 국가라는 상황을 전제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는 원리는 평화 통일 지향이다.

③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는 근거가 되는 원리는 국제 평화주의이다.

④ 국가가 문화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문화생활을 위한 조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원리는 문화 국가의 원리이다.

1 ④ 2 ③

1 복지 국가의 원리와 국제 평화주의 이해

(문제 분석)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원리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고, 국제 질서를 존중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의 번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리는 국제 평화주의이다. 따라서 A는 복지 국가의 원리, B는 국제 평화주의이다.

(정답 찾기) ④ 복지 국가의 원리는 국가가 적절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 질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하는 근거가 된다.

(오답 피하기) ①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국가 권력이 창설되어야 한다는 원리는 국민 주권주의이다.

② 국민 주권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복수 정당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③ 모든 헌법의 기본 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이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 원리가 된다.

⑤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우리나라 헌법 규정은 국제 평화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2 복지 국가의 원리 이해

(문제 분석)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중 A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정답 찾기) ③ 복지 국가의 원리는 국가에 사회 보장·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가 되는 원리이다.

(오답 피하기) ① 남북 분단 상황을 전제로 한 우리나라 헌법 특유의 원리는 평화 통일 지향이다.

② 복지 국가의 원리는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④ 국가가 문화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리는 문화 국가의 원리이다.

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의 지위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근거가 되는 원리는 국제 평화주의이다.

03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본문 29~30쪽

수능 기본 문제

01 ② 02 ③ 03 ① 04 ② 05 ⑤ 06 ④
07 ③ 08 ④

01 청구권의 이해

(문제 분석) A는 청구권이다. 청구권은 국민이 국가에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이 국가나 타인에 의해 침해당하였을 때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정답 찾기) ②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오답 피하기) ①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배제하는 소극적·방어적 성격의 권리는 자유권이다.

③ 다른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권리는 평등권이다.

④ 국민이 국가에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이다.

⑤ 국가 기관의 형성과 정치적인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참정권이다.

02 자유권의 이해

(문제 분석) 갑은 체포되는 과정에서 체포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으며, 을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었다. 따라서 갑, 을이 공통적으로 침해받은 기본권은 자유권이다.

(정답 찾기) ③ 자유권은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방어적 권리이다.

(오답 피하기) 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권리는 사회권이다.

②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서부터 보장되기 시작한 권리는 사회권이다.

④ 청구권은 국가에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성격의 권리이다.

⑤ 자유권도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03 기본권의 유형 이해

(문제 분석) 청구권과 참정권은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권리이다.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권리는 사회권이다.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는 청구권이다. 국민이 국가 기관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참정권이다. 국

가에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는 사회권이다.

정답 찾기 ① 갑은 참정권을 기준으로 일관되게 옳은 응답을 하였다.

04 사회권과 참정권의 이해

문제 분석 A는 사회권, B는 참정권이다.

정답 찾기 ② 사회권은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위해 등장한 적극적 권리이다.

오답 피하기 ① 갑, 을은 사회권에 대해 설명하였고, 병은 참정권에 대해 설명하였으므로 ㉠은 병이다.

③ 교육을 받을 권리와 근로의 권리는 사회권에 해당한다.

④ 사회권, 참정권 모두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인정되는 권리이다.

⑤ 국가의 정치적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는 참정권이다.

05 평등권과 자유권의 이해

문제 분석 A는 평등권, B는 자유권이다.

정답 찾기 ⑤ 평등권, 자유권 모두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포괄적 성격의 권리이다.

오답 피하기 ① 국가의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참정권이다.

② 모든 기본권은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③ 다른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권리는 평등권이다.

④ 평등권, 자유권 모두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06 과잉 금지의 원칙 이해

문제 분석 A 원칙은 과잉 금지의 원칙이다.

정답 찾기 ㄱ. 과잉 금지의 원칙은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 시 국가 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원칙이다.

ㄴ. 과잉 금지의 원칙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기본 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다.

ㄷ. 과잉 금지의 원칙은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제한의 목적과 수단 사이에 적절한 비례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오답 피하기 ㄴ. 과잉 금지의 원칙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07 사회권의 이해

문제 분석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모두 사회권에 해당한다.

정답 찾기 ㄴ. 사회권은 국가의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보장될 수 있는 권리이다.

ㄷ. 사회권은 자본주의 경제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한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오답 피하기 ㄱ. 사회권은 헌법에 열거되어야 보장되는 권리이다.

ㄷ. 국민이 국가 구성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는 공무원 담임권이다. 공무원 담임권은 참정권에 해당한다.

08 자유권의 이해

문제 분석 A는 자유권이다.

정답 찾기 ④ 자유권은 국가의 부당한 침해 배제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오답 피하기 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는 평등권이다.

②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참정권이다.

③ 자유권은 구체적 내용이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포괄적 성격의 권리이다.

⑤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하였을 때 국가에 구제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청구권이다.

- 1 ④ 2 ⑤ 3 ③ 4 ④ 5 ① 6 ⑤
7 ① 8 ④

1 참정권, 사회권, 자유권의 이해

(문제 분석) 갑이 침해받은 권리는 참정권과 사회권이며, 을이 침해받은 권리는 사회권과 자유권이다. 따라서 A는 참정권, B는 사회권, C는 자유권이다.

정답 찾기 ④ 자유권은 구체적인 내용이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포괄적 성격의 권리이다.

오답 피하기 ①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통해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권리는 사회권이다.

②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를 배제하는 방어적 권리는 자유권이다.

③ 국가의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보장되는 권리는 사회권이다.

⑤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는 청구권이다.

2 자유권과 사회권의 이해

(문제 분석) A는 자유권, B는 사회권이다.

정답 찾기 ⑤ 자유권은 헌법에 명시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권리이지만, 사회권은 헌법에 명시되어야만 보장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법률을 통해 기본권을 구체화함으로써 보장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이다.

오답 피하기 ① 자유권은 국가가 개인의 자기 결정 영역을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음으로써 보장되는 소극적 성격의 권리이다.

② 사회 정의 및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권리는 사회권이다.

③ 국가를 상대로 일정한 급부를 요구함으로써 국가의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보장되는 권리는 사회권이다.

④ 자유권은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부터 강조된 권리이며, 사회권은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서부터 보장된 권리이다.

3 기본권 제한의 한계 이해

(문제 분석) 갑은 △△법 □□조가 재판받을 권리, 즉 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정답 찾기 ㄱ. 갑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한 권리는 재판받을 권리로서 청구권이다. 청구권은 실제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이다.

ㄴ. 헌법 재판소는 해당 법률 조항이 갑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으므로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오답 피하기 ㄷ. 헌법 재판소는 해당 법률 조항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증대하지만, 수형자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

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헌법 재판소는 해당 법률 조항이 기본권 제한을 통해 보호하려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더 크다고 보았다.

4 사회권과 자유권의 이해

(문제 분석) 포괄적 성격의 권리는 자유권이므로 A는 사회권, B는 자유권이다.

정답 찾기 ④ (가)에는 사회권에 '예', 자유권에 '아니요'라고 답할 수 있는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사회권은 국가의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보장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다른 기본권 실현의 전제가 되는 본질적 권리는 평등권이다.

② 자유권은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부터 강조된 권리이며, 사회권은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서부터 강조된 권리이다.

③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권리는 사회권이다.

⑤ (나)에는 사회권, 자유권 모두에 대해 '예'라고 답할 수 있는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사회권, 자유권 모두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질문은 (나)에 들어갈 수 없다.

5 참정권과 평등권의 이해

(문제 분석) A는 참정권, B는 평등권이다.

정답 찾기 ① 참정권은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 기관의 형성과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오답 피하기 ② 평등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③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권리는 참정권이다.

④ 다른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권리는 평등권이다.

⑤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국가에 일정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이다.

6 평등권과 청구권의 이해

(문제 분석)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는 청구권이며,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권리는 평등권이다. 만약 A가 청구권, B가 평등권이면 채점 결과 최대 2점이 되므로 A는 평등권, B는 청구권이 된다.

정답 찾기 ㄷ. 평등권, 청구권 모두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준수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는 권리이다.

ㄴ. 질문 1과 질문 2의 첫 번째 내용은 옳은 내용이 되므로 (가), (나) 중 하나는 옳은 내용이 들어가고, 하나는 틀린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국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청구권이다. 해당 내용이 (가)에 들어가면 옳은 내용이 되므로 (나)에는

틀린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아니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평등권이므로 해당 내용은 (나)에 들어갈 수 없다.

오답 피하기 ㄱ. 평등권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보장되는 권리이다.

ㄴ.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해 등장한 현대적 권리는 사회권이다.

7 기본권 유형의 이해

문제 분석 국가의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보장되는 권리는 사회권이므로 A는 사회권이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청구권과 관련된 헌법 조항이므로 B는 청구권이다. 따라서 C는 자유권이다.

정답 찾기 ㄱ. 자유권과 달리 사회권, 청구권 모두 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사회권과 관련된 헌법 조항이므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오답 피하기 ㄷ.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정치적 기본권은 참정권이므로 해당 내용은 (나)에 들어갈 수 없다.

ㄹ. C는 자유권이므로 (다)에 ‘소극적·방어적 권리임.’이 들어갈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자유권과 관련된 헌법 조항이므로 해당 내용은 (라)에 들어갈 수 있다.

8 기본권 유형의 이해

문제 분석 A는 참정권, B는 사회권, C는 자유권, D는 청구권이다.

정답 찾기 ④ 참정권은 국가 기관의 형성과 국가의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이다.

오답 피하기 ① 참정권, 사회권 모두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권리이다.

②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기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는 청구권이다.

③ 국가가 개인의 자기 결정 영역을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음으로써 보장되는 소극적 성격의 권리는 자유권이다.

⑤ 직업 선택의 자유는 자유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에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들어갈 수 있다.

기출 플러스

본문 35쪽

1 ④ 2 ①

1 평등권의 이해

문제 분석 헌법 재판소는 ‘긴급 재난 지원금 가구 구성 및 이의 신청 처리 기준’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고 보아 난민 인정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A는 평등권이다.

정답 찾기 ④ 평등권은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

오답 피하기 ①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을 배제하는 방어적 권리는 자유권이다.

② 국민이 국가 기관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참정권이다.

③ 다른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구제받기 위한 절차적 권리는 청구권이다.

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평등권도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준수한다면 제한될 수 있는 권리이다.

2 자유권의 이해

문제 분석 A는 적법 절차의 원리를 구현하여 보장되므로 자유권이다.

정답 찾기 ① 자유권은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를 배제하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권리이다.

오답 피하기 ②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 권리는 사회권이다.

③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는 평등권이다.

④ 국가의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는 참정권이다.

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04 정부 형태

수능 기본 문제

본문 38쪽

01 ④ 02 ③ 03 ④ 04 ⑤

01 전형적인 대통령제의 이해

[문제 분석] 갑국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호 독립적으로 조직되고 국민에 의해 선출된 행정부 수반이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부여받아 행정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갑국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정답 찾기] ④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가 동일인이다.

[오답 피하기] ①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 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는 경우에 연립 내각이 구성된다.

②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가진다.

③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 의원은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⑤ ‘탄핵 소추권’은 대통령제에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므로 (가)에 들어갈 수 있다.

02 전형적인 정부 형태의 이해

[문제 분석] 의회 의원과 행정부 수반이 별도의 선거를 통해 구성되고 행정부 수반이 국가 원수의 지위를 갖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며,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대표가 행정부 수반으로 선출되어 내각을 구성하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따라서 갑국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 을국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정답 찾기] ③ 의원 내각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의원 내각제에서는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

④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속한 여당의 의회 의석수보다 야당의 의회 의석수가 더 많은 경우에 여소야대 현상이 발생한다.

⑤ 의원 내각제에서와 달리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엄격하게 보장된다.

03 전형적인 정부 형태의 이해

[문제 분석] ‘의회 의원이 행정부 수반을 겸직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갑국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 ‘아니요’라고 답한 을국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정답 찾기] 나.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

리. 행정부 수반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따라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오답 피하기] 그. 대통령제에서는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인이다.

디.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 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는 경우에 연립 내각이 구성된다. 따라서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의회 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면 갑국에서는 연립 내각이 구성되지 않는다.

04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이해

[문제 분석]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의원 내각제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따라서 A는 대통령제, B는 의원 내각제이다.

[정답 찾기] ⑤ ‘국회가 대통령에게 국무총리나 국무 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음.’은 의원 내각제 요소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① 대통령제에서는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일치한다.

②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 의원은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③ 대통령제와 달리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가진다.

④ ‘국무총리를 두어 행정 각부를 통할하게 함.’은 의원 내각제 요소에 해당한다.

수능 실전 문제

본문 39~41쪽

1 ④ 2 ④ 3 ④ 4 ② 5 ② 6 ③

1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의 이해

[문제 분석] 행정부와 입법부가 상호 협조 관계에 있으며 의회 다수파가 권력의 핵심이 되어 의회의 힘이 막강한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따라서 A는 의원 내각제이다.

[정답 찾기] ④ 행정부 수반에게 권한이 집중됨으로써 독재 출현 우려가 있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따라서 (가)에는 '행정부 수반에게 권한이 집중됨으로써 독재 출현 우려가 있다'가 들어갈 수 없다.

[오답 피하기] ①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속한 여당의 의회 의석 수보다 야당의 의회 의석수가 더 많은 경우에 여소야대 현상이 발생한다.

② 대통령제에서는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일치한다.

③ 의원 내각제에서와 달리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엄격하게 보장된다.

⑤ 대통령제에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적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나)에는 해당 내용이 들어갈 수 없다.

2 전형적인 정부 형태의 이해

[문제 분석] 전형적인 정부 형태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에 관한 질문과 응답 결과를 통해 옳게 응답한 학생을 파악할 수 있다.

[정답 찾기] ㄱ. '대통령제에서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가?'라는 갑의 질문에 옳게 응답한 학생은 '아니요'라고 응답한 병, 정이다. '의원 내각제에서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는가?'라는 을의 질문에 옳게 응답한 학생은 '아니요'라고 응답한 정이다. 따라서 갑과 을의 질문에 모두 옳게 응답한 학생은 정이다.

ㄴ. (가)에 '의원 내각제에서 행정부 수반은 의회 해산권을 가지는가?'가 들어가면, '예'라고 응답한 갑, 을이 옳게 응답한 학생이다.

ㄷ. (가)에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는 동일인인가?'가 들어가면, '예'라고 응답한 갑, 을이 옳게 응답한 학생이다. (나)에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가지는가?'가 들어가면, '예'라고 응답한 갑이 옳게 응답한 학생이다. 따라서 4개의 질문에서 을과 병은 각각 1개의 질문에 대해서만 옳게 응답하였다.

[오답 피하기] ㄸ. (나)에 '의원 내각제와 달리 대통령제에서 의회 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가?'가 들어가면, '아니요'라고 응답한 을, 병이 옳게 응답한 학생이다.

3 전형적인 정부 형태의 이해

[문제 분석]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의원 내각제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따라서 A는 대통령제, B는 의원 내각제이다.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에 관해 묻는 질문에 대한 갑과 을의 응답을 나타낸 표에서 질문 (가)에 대해 옳게 응답한 사람은 갑이고, 옳은 응답의 개수가 갑과 을 각각 2개이므로 을은 (나), (다) 질문에 모두 옳게 응답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갑은 (가), (다) 질문에 모두 옳게 응답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정답 찾기] ④ (나) 질문에 대해 을만 '예'라고 옳게 응답하였다. 대통령제와 달리 의원 내각제에서 행정부 수반은 의회 해산권을 가진다. 따라서 (나)에는 'A와 달리 B에서 행정부 수반은 의회 해산권을 가지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의원 내각제에서 행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 의원은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③ (가) 질문에 대해 갑만 '예'라고 옳게 응답하였다. 대통령제에서 의회 의원 선거와 국민이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는 선거는 별도로 실시된다. 따라서 (가)에는 'A에서는 의회 의원 선거와 국민이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는 선거가 별도로 실시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⑤ (다) 질문에 대해 갑, 을 모두 '아니요'라고 옳게 응답하였다. 의원 내각제와 달리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엄격하게 보장된다. 따라서 (다)에는 'B와 달리 A에서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엄격하게 보장되는가?'가 들어갈 수 없다.

4 전형적인 정부 형태의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를 통해 갑국은 의원 내각제, 을국은 대통령제 정부 형태임을 파악할 수 있다.

[정답 찾기] ㄱ. 의원 내각제에서는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ㄴ. 대통령제에서는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없다.

[오답 피하기] ㄷ.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가 동일인이다.

ㄹ. 의원 내각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5 전형적인 정부 형태의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에서 갑은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에 해당하는 내용의 카드와 (가)의 내용이 담긴 카드를 뽑았고, 을은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 해당하는 내용의 카드와 (나)의 내용이 담긴 카드를 뽑았다. 게임의 승자가 을이므로 (가)에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 해당하는 내용 또는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 모두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고, (나)에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만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정답 찾기] ② 의원 내각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따라서 (가)에는 ‘행정부 수반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가 들어갈 수 없다.

오답 피하기 ① 의원 내각제에서 연립 내각이 구성되기도 한다. 따라서 (가)에는 ‘연립 내각이 구성되기도 한다.’가 들어갈 수 없다.

③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가 동일인이다. 따라서 (나)에는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가 동일인이다.’가 들어갈 수 없다.

④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모두에서 의회 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 따라서 (나)에는 ‘의회 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가 들어갈 수 없다.

⑤ 의원 내각제에서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갖고,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가진다.

6 전형적인 대통령제의 이해

문제 분석 갑국은 국민이 행정부 수반을 선거로 선출하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임을 파악할 수 있다.

정답 찾기 나. 대통령제에서 의회는 탄핵 소추권을 통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

다. t 시기와 t+2 시기에 대통령이 속한 여당의 의회 의석수보다 야당의 의회 의석수가 더 많은 여소야대 현상이 나타났다.

오답 피하기 가. 갑국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 인정되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르.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 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는 경우 연립 내각이 구성된다.

기출 플러스

본문 42쪽

1 ⑤

1 전형적인 정부 형태의 특징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한 정당별 의회 의석수는 다음과 같다.

(단위: 석)

구분	A당	B당	C당
t 시기	70	110	20
t+1 시기	60	90	50
t+2 시기	80	110	10
t+3 시기	101	66	33

정답 찾기 ⑤ t~t+3 시기 중 정부 형태가 3회 변경되었다면, t+3 시기에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t+3 시기에 A당은 과반 의석을 차지하였으므로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하였을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① t 시기와 t+1 시기의 정부 형태가 서로 다르다면, t 시기는 대통령제이므로 t+1 시기는 의원 내각제이다.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 의원은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② t 시기는 대통령제이다.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지 않는다.

③ t+3 시기의 정부 형태와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t+2 시기와 같다면, t+2 시기와 t+3 시기의 정부 형태는 모두 대통령제이다. 또한 t+2 시기와 t+3 시기의 행정부 수반은 A당 소속이다. 따라서 t+3 시기에는 여당 의석수가 야당보다 많다.

④ 대통령제의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 t+1 시기와 t+2 시기 모두 대통령제라면, t~t+3 시기 중 정부 형태가 2회 변경될 수 없다.

05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

수능 기본 문제

본문 47~48쪽

01 ⑤ 02 ③ 03 ⑤ 04 ③ 05 ① 06 ③
07 ③ 08 ②

01 국회의 권한 이해

[문제 분석]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권한을 가지는 우리나라 국가 기관인 A는 국회이다.

[정답 찾기] ⑤ 국회는 대통령,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가진다.

- [오답 피하기]** ① 헌법 재판소는 위헌 법률 심판권을 가진다.
② 대통령은 조약의 체결 및 비준권을 가진다.
③ 대통령은 대법원장, 대법관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다.
④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검사권을 가진다.

02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 이해

[문제 분석]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따라서 A는 국회, B는 대통령, C는 법원이다. 국가 권력의 분리와 합리적 제약을 통하여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이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원칙은 권력 분립 원칙이다. 따라서 (가)에는 ‘권력 분립’이 들어갈 수 있다.

[정답 찾기] ③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① 대통령은 외국과의 조약 체결에 대한 비준권을 가진다. 국회는 조약의 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 감사원은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검사한다.
④ 국회는 국정 감사권을 가진다.
⑤ (가)에는 ‘권력 분립’이 들어갈 수 있다.

03 사법권의 독립 이해

[문제 분석] 우리나라에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장치로 법원의 독립, 법관의 독립, 삼급 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정답 찾기] 다. 우리나라에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장치에 대해 발표한 내용에서 세 사람만 옳게 대답했다는 교사의 말에 따라 갑, 을, 병이 옳게 대답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ㄴ. 공개 재판의 원칙에 따라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장치에 해당한다. (가)에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다양한 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가)에는 ‘공개 재판의 원칙에 따라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가 들어갈 수 없다.

[오답 피하기] ㄱ.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ㄴ. 삼급 제도는 3심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도 있다.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 소송이나 국회 의원 선거 소송은 대법원을 전속 관할로 하는 단심제가 적용된다.

04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 이해

[문제 분석] A는 헌법 재판소, B는 대통령, C는 국회, D는 대법원이다.

[정답 찾기] ③ 대통령은 국회에 임시회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대통령은 국무 회의의 의장이다.

- ②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이루어진다.
④ 헌법 재판소는 탄핵 심판의 권한을 가진다.
⑤ 헌법 소원 심판은 국민이 청구할 수 있다.

05 대법원의 권한 이해

[문제 분석] 대법원은 최고 법원으로서 상고·재항고 사건의 최종심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A는 대법원, (가)는 상고, (나)는 재항고이다.

[정답 찾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오답 피하기] ② 대법원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으로 국회를 견제할 수 있다.

- ③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
④ (가)에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3심 재판을 청구하는 ‘상고’가 들어간다.
⑤ (나)에는 2심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여 3심 재판을 청구하는 ‘재항고’가 들어간다.

06 우리나라 헌법 개정 절차의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는 우리나라 헌법 개정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정답 찾기] ㄴ. 헌법 개정 절차에서 국회 의결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ㄷ. 국민 투표는 직접 민주제의 요소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ㄱ.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ㄴ. 헌법 개정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07 위헌 법률 심판의 이해

[문제 분석] 위헌 법률 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가의 여부를 심판하여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

도이다. 따라서 (가)는 위헌 법률 심판, A는 국회, B는 법원, C는 헌법 재판소이다.

정답 찾기 ③ 헌법 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오답 피하기 ① 법원은 명령·규칙의 위헌성 및 위법성에 대한 심사권을 가진다.

② 헌법 재판소는 위헌 법률 심판권을 통해 국회를 견제한다.

④ 국회는 국정 감사권, 국정 조사권을 가진다.

⑤ (가)에는 '위헌 법률 심판'이 들어간다.

08 헌법 재판소의 권한 이해

문제 분석 헌법 재판소는 헌법을 기준으로 헌법에 반하는 법률 조항이나 공권력 행사 등을 바로잡는 헌법 재판을 담당한다.

정답 찾기 ② 대통령, 국무총리 모두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된다.

오답 피하기 ① 위헌 법률 심판은 법원의 제청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③ 정당의 해산 심판은 정부의 청구에 의해 이루어진다.

④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은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해당 국가 기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청구에 의해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를 결정하는 심판이다.

⑤ 법원은 헌법 소원에 관한 심판의 청구 주체가 아니다.

수능 실전 문제

본문 49~52쪽

- | | | | | | |
|-----|-----|-----|-----|-----|-----|
| 1 ④ | 2 ② | 3 ③ | 4 ① | 5 ⑤ | 6 ③ |
| 7 ③ | 8 ④ | | | | |

1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 이해

문제 분석 대통령은 조약의 체결 및 비준권을 가지며, 국회는 조약의 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따라서 A는 국회, B는 대통령이다.

정답 찾기 ④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가진다.

오답 피하기 ①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검사를 담당한다.

② 국무총리는 국무 위원 임명 제청권을 가진다.

③ 국회 의장은 국회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2 헌법 재판소의 권한 이해

문제 분석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A는 헌법 재판소, (가)는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정답 찾기 ㄱ. 헌법 재판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ㄴ. 같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5 제1항 제1호가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자유권은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를 배제하는 소극적·방어적 권리이다.

오답 피하기 ㄴ.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 재판소에 청구하는 것이므로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수단 이 아니다.

ㄷ.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 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3 우리나라의 법률 제·개정 절차 이해

문제 분석 우리나라에서는 국회 의원 10명 이상 또는 국회의 위원회,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정답 찾기 ③ 상임 위원회는 의안을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① 국회 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1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② 국회 의장은 국회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되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다.

④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 정부로 이송되고, 이송된 법률안은 일정 기간 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⑤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은 법률안을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4 대통령과 헌법 재판소의 권한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의 수행 평가 답안 내용과 점수를 통해 (가), (나), ㉠, ㉡, ㉢을 파악할 수 있다.

정답 찾기 ㉠.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 제안권을 가지므로 ㉠은 '1점'이다. 상고 사건의 최종심 관할권은 대법원이 가지고 있으므로 ㉡은 '0점'이다.

㉢. (가) 답안 내용의 점수는 '0점'이므로 (가)에는 대통령의 권한이 아닌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은 법원의 권한이므로 (가)에는 해당 내용이 들어갈 수 없다.

오답 피하기 ㉢. 대통령,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권은 국회의 권한이다. 따라서 (나)에 '대통령,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권'이 들어가면, ㉢은 '0점'이다.

㉣. 국정 조사권은 국회의 권한이다. 따라서 ㉣이 '0점'이면, (나)에는 '국정 조사권'이 들어갈 수 있다.

5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 이해

(문제 분석) 국무 위원 해임 건의권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B를 A, C와 구분할 수 있으므로 B는 법원이다. 행정 각부를 통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C를 A, B와 구분할 수 있으므로 C는 국무총리이다. 따라서 A는 국회이다.

정답 찾기 ⑤ 국회는 탄핵 소추권으로 국무총리를 견제할 수 있다. 법원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을 통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다. 법원과 달리 국회는 국정 감사권과 국정 조사권이 있다. 국무총리와 달리 국회는 대통령의 조약 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가 기관 A~C에 대한 질문에 모두 옳게 응답한 학생은 무이다.

6 법원과 헌법 재판소의 권한 이해

(문제 분석)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할 때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 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한다. 따라서 A는 헌법 재판소, B는 법원이다. 당사자가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음에도 법원이 그 제청 신청을 기

각하는 경우, 당사자는 직접 헌법 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심사 권한이 있다. 따라서 (가)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 (나)는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다.

정답 찾기 ㉠. 법원의 독립을 위해 헌법과 법률로 법원의 조직을 규정하고 있다.

㉢.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오답 피하기 ㉠. 최고 법원으로 상고·재항고 사건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법원은 대법원이다.

㉢. 대법원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성 및 위법성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나)에는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들어갈 수 있다.

7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 이해

(문제 분석) 국정 조사의 권한은 국회가 가지므로 A는 국회이다.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감사를 담당하므로 B는 대통령, C는 감사원이다.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성 및 위법성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지는 D는 대법원이다.

정답 찾기 ③ 대법원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통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탄핵 심판권은 헌법 재판소가 가진다.

② 국회는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권과 결산 심사권을 가진다.

④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국무 회의는 행정부 최고 심의 기관으로 대통령을 의장으로 한다.

8 법원과 헌법 재판소의 권한 이해

(문제 분석) 갑은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이를 혼인의 무효 사유로 규정한 민법 제809조 제1항 및 제815조 제2호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 재판소에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해 달라고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A는 법원, B는 헌법 재판소이며, (가)는 위헌 법률 심판, (나)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정답 찾기 ④ 헌법 재판소는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 혼인을 금지하는 금혼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갑은 법원에 제청 신청을 하였으므로 (가)에는 '헌법 소원 심판'이 들어갈 수 없다.

②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은 국민이 청구할 수 있다.

③ 갑은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여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⑤ 법원은 명령·규칙의 위헌성 및 위법성에 대한 심사권을 가진다.

- 1 ③ 2 ③ 3 ② 4 ④

1 우리나라 헌법 기관의 이해

[문제분석] 우리나라 헌법 기관 중 A는 대통령, B는 국무 회의, C는 국회, D는 헌법 재판소, E는 국무총리이다.

[정답 찾기] ③ 국회는 국무 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을 대통령에게 행사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국무 회의는 행정부 최고 심의 기관이다.

② 국정 조사권은 국회의 권한이다.

④ 대법원은 대통령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 소송 사건을 담당한다.

⑤ 국회 의장은 탄핵 심판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우리나라 헌법 기관의 이해

[문제분석] 우리나라 헌법 기관 중 A는 국회, B는 대통령, C는 국무총리, D는 대법원, E는 헌법 재판소이다.

[정답 찾기] ③ 국회는 대통령에게 국무총리의 해임을 건의할 권한을 가진다.

[오답 피하기] ①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의 제소에 따라 헌법 재판소가 정당의 해산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국무총리는 국무 회의의 부의장이다.

④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 재판소장을 임명한다.

⑤ 헌법 재판소는 권한 쟁의 심판을 통해 국회와 대통령 상호 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을 심판한다.

3 헌법 재판소의 권한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자료에서 A는 위헌 법률 심판, B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 C는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정답 찾기] ②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를 둔 명령이나 규칙은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명령이나 규칙의 위헌성, 위법성에 대한 최종 심사권은 대법원의 권한이다.

[오답 피하기] ① A는 위헌 법률 심판이다.

③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없다.

④ 헌법 소원 심판의 청구권자는 국민이다.

⑤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 모두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견제 수단이 된다.

4 법원과 헌법 재판소의 권한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자료에서 A는 위헌 법률 심판, B는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정답 찾기] ④ 위헌 법률 심판은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을 요구한다.

[오답 피하기] ① 위헌 법률 심판은 소송 당사자의 제청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제청할 수 있다.

② 행정 법원이 제청한 A는 소년부 법원에서 불처분 결정된 사건의 수사 경력 자료의 삭제 및 보존 기간을 규정하지 않은 법 조항을 심판 대상으로 하였다.

③ 을이 청구한 B는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⑤ 헌법 재판소는 법 조항과 법 조항이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06 지방 자치

수능 기본 문제

본문 57쪽

01 ② 02 ④ 03 ① 04 ④

01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자료에서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은 지방 의회,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는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은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다. 갑은 두 개의 진술에 대해서만 옳게 표시하였다는 내용을 통해 A는 지방 의회, B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임을 파악할 수 있다.

(정답 찾기) ②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주민 소환의 대상이다.

(오답 피하기) ① 지방 의회는 지역구 의원, 비례 대표 의원으로 구성된다.

③ 지방 의회는 조례에 대한 제·개정 및 폐지권을 가진다.

④ 을은 세 번째 진술에 대해서만 옳게 표시하였다.

⑤ (가) 진술에 대해서 갑, 을 모두 옳지 않게 표시하였다. 따라서 (가)에는 지방 의회의 권한이 아닌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 지방 자치 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기관은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므로 ‘지방 자치 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는 (가)에 들어갈 수 있다.

02 우리나라의 주민 참여 제도 이해

(문제분석) A는 주민 투표 제도, B는 주민 참여 예산 제도이다.

(정답 찾기) 나.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지방 자치 단체 예산의 책임성 및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르. 주민 투표 제도, 주민 참여 예산 제도 모두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오답 피하기) 가. 주민 투표 제도를 통해 주민이 법률을 개정할 수 없다. 법률의 제정 및 개정 권한은 국회가 가진다.

디.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은 지방 의회의 권한이다.

03 주민 참여의 이해

(문제분석) 주민은 해당 지방 자치 단체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제도를 통해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참여할 수 있다.

(정답 찾기) ① 주민은 선거를 통해 지방 의회 의원,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을 선출한다.

(오답 피하기) ②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지방 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가진다.

③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제도는 지역 주민의 자치 행정 참여를 확대하는 측면이 강하다.

④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제도는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에 해당한다.

⑤ 선거,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제도가 정책 결정 과정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

04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 및 주민 투표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자료에는 지방 자치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을 포함한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를 달리 하기 위해서는 주민 투표법에 따른 주민 투표를 거쳐야 함이 나타나 있다.

(정답 찾기) 가. 지방 의회는 지역구 의원, 비례 대표 의원으로 구성된다.

나. 지방 자치 단체의 장, 지방 의회 의원(비례 대표 지방 의회 의원 제외)은 주민 소환의 대상이다.

디. 주민 투표는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직접 민주제 요소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르. 지방 의회는 주민 투표법의 개정 및 폐지 권한이 없다. 법률의 제·개정 권한은 국회가 가진다.

1 ② 2 ② 3 ④ 4 ③

1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 및 주민 참여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의 □□도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를 통해 주민이 해당 지역의 조례안에 대해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정답 찾기 ②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인 ○○시장은 ○○시의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지방 자치 단체인 ○○시는 중앙 정부와 수직적 권력 분립 관계에 있다.

③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주민 투표를 거처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은 지방 의회의 권한이다.

⑤ 주민이 해당 지역의 조례안에 대해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조례 개정 및 폐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은 해당 지역의 조례안에 대해 직접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2 지방 자치 단체의 이해

(문제 분석)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단체는 광역 자치 단체와 기초 자치 단체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갑은 옳은 내용을 발표하였다. 광역 자치 단체의 의결 기관으로는 시·도 의회가 있고, 기초 자치 단체의 집행 기관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있다. 따라서 을, 병은 옳지 않은 내용을 발표하였다.

정답 찾기 ㄱ. 기초 자치 단체의 집행 기관과 광역 자치 단체의 집행 기관은 모두 주민의 선거로 선출된다. 따라서 (가)에 ‘기초 자치 단체의 집행 기관과 달리 광역 자치 단체의 집행 기관은 주민의 선거로 선출됩니다.’가 들어가면, 옳은 내용을 발표한 학생은 갑뿐이다.

ㄴ. 옳은 내용을 발표한 학생이 2명이라면, 갑과 정이 옳은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따라서 (가)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의결 기관인 지방 의회는 예산 심의 및 확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가 들어갈 수 있다.

오답 피하기 ㄴ. 지방 자치 단체의 집행 기관인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지방 자치 단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가)에 ‘지방 자치 단체의 집행 기관인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지방 자치 단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가 들어가면, 옳지 않은 내용을 발표한 학생은 을, 병이다.

ㄷ. 을, 병이 옳지 않은 내용을 발표했으므로 옳지 않은 내용을 발표한 학생이 2명이라면, (가)에는 옳은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에 관한 규칙 제·개정 및 폐지권은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가)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의결 기관인 지방 의회는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에 관한 규칙 제·개정 및 폐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가 들어갈 수 없다.

3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 이해

(문제 분석) 조례 제·개정 및 폐지권,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 심의 및 확정권, 지방 자치 단체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권은 지방 의회의 권한이며,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에 관한 규칙 제·개정 및 폐지권은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의 권한이다. <카드 1>과 <카드 3>을 뽑은 갑과 <카드 2>와 ㉠을 뽑은 을 중에서 을이 승리했으므로 갑은 A에 대한 권한이 적힌 카드 2장을 뽑았고, 을은 A에 대한 권한과 B에 대한 권한이 적힌 카드를 각각 1장씩 뽑았다. A는 지방 의회, B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된다.

정답 찾기 ㄴ. 지방 의회는 지방 자치 단체의 의결 기관이고,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집행 기관이다.

ㄷ. ‘지방 자치 단체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은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의 권한이다. ㉠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의 권한이 적힌 카드가 들어가야 하므로 (가)에 ‘지방 자치 단체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이 들어가면, ㉠에는 ‘<카드 5>’가 들어갈 수 있다.

오답 피하기 ㄱ. <카드 4>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의 권한이므로 ㉠은 ‘<카드 4>’가 될 수 있다.

4 지방 자치 제도의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사례에서 해당 심판 대상 조항이 지방 자치 단체의 장과 지방 의회 사이의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침해하는 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정답 찾기 ③ 지방 의회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편성한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을 심의·확정한다.

오답 피하기 ①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임기 중에 주민의 투표를 통해 그 직을 상실할 수 있다.

② 지방 자치 단체의 장, 지방 의회 의원(비례 대표 지방 의회 의원 제외)은 주민 소환의 대상이다.

④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중앙 정부와 수직적 권력 분립 관계에 있다.

⑤ 헌법 재판소는 심판 대상 조항이 지방 의회와 집행 기관 사이의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침해할 우려로 확대된다거나 또는 지방 자치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기출 플러스 본문 60쪽

1 ② 2 ④

1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이해

[문제분석] ㉠은 ‘주민 투표’, ㉡은 ‘주민 소환’이다.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단체 기관 중 A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 B는 지방 의회임을 파악할 수 있다.

[정답 찾기] ② 지방 의회는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 사무에 대한 감사권을 가진다.

[오답 피하기] ①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지방 의회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편성한 지방 자치 단체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④ 지방 의회는 조례 제정권,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규칙 제정권을 가진다.

⑤ ㉠은 ‘주민 투표’, ㉡은 ‘주민 소환’이다.

2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자료에서 A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 B는 지방 의회, (가)는 주민 소환, (나)는 주민 투표임을 파악할 수 있다.

[정답 찾기] 나. 주민 소환과 주민 투표 제도 모두 지방 자치의 민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르. 지방 의회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편성한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확정권을 가진다.

[오답 피하기] 가.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제도를 통해 주민은 지방 의회에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디. 지방 의회가 의결한 조례의 시행을 위해서 주민 투표를 거처야 하는 것은 아니다.

07 선거와 선거 제도

본문 64~65쪽

수능 기본 문제

01 ⑤ 02 ① 03 ④ 04 ⑤ 05 ③ 06 ①

07 ② 08 ④

01 선거의 기능 이해

[문제분석] 선거권 연령과 정당 가입 연령이 하향되면서 정치 참여 경험의 기회가 늘어나 정치 교육의 장(場)이 제공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정답 찾기] ⑤ 선거를 통해 후보자와 정당의 공약을 비교하고 쟁점을 논의하며,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형성해 나간다는 점에서 선거는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가치와 태도를 형성하게 한다.

[오답 피하기] ① 정치권력을 행사할 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제시문에서 강조하는 선거의 기능으로 보기 어렵다.

② 정치권력 남용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제시문에서 강조하는 선거의 기능으로 보기 어렵다.

③ 선출된 대표자의 정치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제시문에서 강조하는 선거의 기능으로 보기 어렵다.

④ 구성원 간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조정하고 통합하는 것은 제시문에서 강조하는 선거의 기능으로 보기 어렵다.

02 대표 결정 방식의 이해

[문제분석] ○○ 단체 대표 선거의 대표 선출 방식 <1안>은 단순 다수 대표제이고, <2안>은 절대다수 대표제이다.

[정답 찾기] 가. 절대다수 대표제는 단순 다수 대표제에 비해 당선자의 대표성을 제고하는 데 효과적이다.

[오답 피하기] 나. 단순 다수 대표제에 비해 절대다수 대표제는 선거 비용과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다.

디. <1안>에서는 A가 37표, B가 32표, C가 31표를 얻으므로 A가 당선자이다. <2안>에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자가 없으므로 득표수가 많은 상위 2인인 A, B에 대해 결선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결선 투표에서 집단 3은 B에게 투표하고, 집단 4는 A에게 투표한다. 결선 투표 결과 A는 46표, B는 54표를 얻어 B가 당선자가 된다. 그러므로 <1안>과 <2안>의 당선자는 동일인이 아니다.

03 민주 선거의 원칙 이해

[문제분석] 유권자가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투표하여 대표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원칙은 직접 선거이다. 유권자가 투표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비밀 선거이다.



정답 찾기 ④ 투표 용지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다면 비밀 선거를 위반한 사례이다.

오답 피하기 ① 특정 성별에 따라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보통 선거를 위반한 사례이다.

② 기표소 내에서 투표 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비밀 선거를 위반한 사례이다.

③ 선거구 간 인구수의 편차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사례이다.

⑤ A는 직접 선거, B는 비밀 선거이다.

04 선거 결과 분석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갑국 의회 의원 선거 결과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석)

구분	A당	B당	C당	D당
지역구 의석수	50	41	4	5
비례 대표 의석수	21	23	0	6
총의석수	71	64	4	11

갑국의 지역구 의원 선거의 선거구 제도는 소선거구제이다.

정답 찾기 ㉔.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D당은 5석을 얻었으므로 D당 후보자가 1위를 차지한 지역구는 5개이다.

㉕. C당은 정당 투표 득표율이 3%임에도 비례 대표 의석수가 0이다. 이를 통해 비례 대표 의석 배분에서 군소 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㉑. 지역구 의석률은 A당이 50%, B당이 41%이며, 비례 대표 의석률은 A당이 42%, B당이 46%이다. A당은 지역구 의석률이 비례 대표 의석률보다 높지만, B당은 지역구 의석률이 비례 대표 의석률보다 낮다.

㉒. C당의 지역구 득표율은 알 수 없다.

05 선거 공영제의 이해

문제 분석 선거 공영제는 공정한 선거의 실현을 위해 선거 과정을 국가가 관리하고 선거 비용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가)에는 옳은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 (나)에는 옳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정답 찾기 ③ 선거 공영제는 재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도 공정한 입후보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므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선거 공영제는 선거에 관한 경비를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국가의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그러므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② 선거구가 특정 후보자 또는 정당에 유리하게 획정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는 선거구 법정주의이다. 그러므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④ 선거 공영제는 선거 운동의 비용, 방식, 기간을 관리하고, 득표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선거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기 때문에 선거 운동을 관리하여 지나친 경쟁을 막고 선거 과열을 방지한다. 그러므로 해당 내용은 (나)에 들어갈 수 없다.

⑤ 선거 공영제는 선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부담하므로 해당 내용은 (나)에 들어갈 수 없다.

06 선거 결과 분석

문제 분석 갑국 의회의 지역구 의원 선거구 수는 100개인데 지역구 의원은 200명이므로 지역구 의원 선거의 선거구 제도는 선거구당 2명씩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이다.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갑국 의회 의원 선거 결과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분	A당	B당	C당	D당
의석수(석)	114	64	6	16

정답 찾기 ㉑. 갑국은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고, A당의 의회 의석률이 과반을 차지하였으므로 A당이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

㉒. B당과 C당은 모두 득표율보다 의회 의석률이 낮으므로 과소 대표되고 있다.

오답 피하기 ㉔. 의회 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선거구별로 1인을 공천하였다면 정당별 의회 의석률이 과반을 넘지 못한다. 그러나 A당의 의회 의석률이 과반을 넘었으므로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2인 이상 공천한 선거구가 있다.

㉕. 중·대선거구제에서는 동일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한다.

07 비례 대표 의원 선거 결과 분석

문제 분석 갑국 의회 의원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	A당	B당	C당	D당
의석수(석)	2	4	1	1
의석률(%)	25	50	12.5	12.5

정답 찾기 ㉑. A당은 2석을 배분받으므로 2명의 당선자를 배출한다.

㉒. C당과 달리 B당은 의석률이 정당 투표 득표율보다 높다.

오답 피하기 ㉒. D당은 1석을 배분받는다.

㉕. 비례 대표 의원 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 이후에 의석 배분 방법이나 후보자 순위가 변경된다면 비례 대표 의석이 유권자의 투표에 의해 직접 결정된 것이 아니므로 직접 선거에 위배된다.

08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 이해

문제 분석 국회 의원 선거는 비례 대표 의원 선거에서 전국을 단위

로 한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국회 의원 선거와 광역 의회 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기초 의회 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의원 선거는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A는 기초 의회 의원 선거, B는 국회 의원 선거, C는 광역 의회 의원 선거이다.

정답 찾기 ④ 국회 의원 선거를 통해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기관인 국회를 구성한다.

오답 피하기 ① 기초 의회 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는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해 1표, 비례 대표 의원 선출을 위해 1표를 행사하므로 1인 2표를 행사한다.

② 광역 의회 의원 선거를 통해 시·도 의회 의원을 선출한다.

③ 기초 의회 의원 선거, 광역 의회 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의원은 모두 단순 다수 대표제로 선출한다.

⑤ 기초 의회 의원 선거, 광역 의회 의원 선거, 국회 의원 선거 모두 4년마다 실시한다.

본문 66~71쪽

수능	실전	문제				
1 ①	2 ④	3 ④	4 ②	5 ⑤	6 ②	
7 ④	8 ⑤					

1 선거 제도의 이해

(문제 분석) 자료는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 선거를 설명하고 있다.

정답 찾기 ① 재외 선거는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 국민에게도 선거권을 보장하여 보통 선거를 실현한다.

오답 피하기 ② 재외 선거는 해외에 마련된 재외 투표소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선거 운영 비용이 불가피하게 늘어날 수 있어서 선거 운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재외 선거 과정에서도 비밀 선거는 적용된다.

④ 재외 선거는 해외 체류 중인 국민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는 직접 선거가 적용된다.

⑤ 재외 선거는 투표일에 이동이 어려운 유권자가 온라인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민주 선거의 원칙 이해

(문제 분석) 민주 선거의 원칙에는 보통 선거, 평등 선거, 직접 선거, 비밀 선거가 있다.

정답 찾기 나.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지나치게 큼에도 불구하고 선거구별 동일한 수의 의원을 선출하는 경우는 평등 선거에 위배되는 사례이다. 그러므로 ㉠에 '평등 선거'가 들어가면, ㉡은 '1점'이다.

㉢.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이 임의로 투표하는 경우는 직접 선거에 위배되는 사례이다. 답란에 직접 선거라고 쓰여 있고, 점수가 1점이므로 (가)에는 해당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사회적 신분, 계급에 따라 선거권을 제한하는 경우는 보통 선거에 위배되는 사례이므로 ㉠은 '1점'이다.

㉤.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 기호별로 색깔이 다른 투표함에 넣도록 하는 경우는 비밀 선거에 위배되는 사례이다. 4번 문항의 점수가 0점이므로 ㉡에는 '비밀 선거'가 들어갈 수 없다.

3 대표 결정 방식의 이해

(문제 분석) A는 단순 다수 대표제, B는 절대다수 대표제, C는 비례 대표제이다. 단순 다수 대표제는 절대다수 대표제에 비해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이는 데 불리하므로 1모듬의 분석이 옳다. 단순 다수 대표제에 비해 비례 대표제는 사표 발생을 줄일 수 있으므로 1모듬의 분석은 옳다. 1모듬과 2모듬 각각 2개씩 정답을 맞혔다.



따라서 (가), (나)에 대한 2모둠의 분석은 모두 옳다.

정답 찾기 나. (가)에는 옳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비례 대표제에 비해 단순 다수 대표제는 소수당의 의석 확보 가능성이 낮다.

르. (나)에는 옳은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단순 다수 대표제, 절대 다수 대표제 모두 소선거구제에 적용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가. 단순 다수 대표제에 비해 절대다수 대표제는 당선자 결정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다. 단순 다수 대표제에 비해 비례 대표제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을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나)에 들어갈 수 없다.

4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이해

문제 분석 A는 국회 의원 선거, B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 선거, C는 기초 의회 의원 선거, D는 대통령 선거이다.

정답 찾기 ② 국회 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에 있어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이루어진다.

오답 피하기 ① 기초 의회 의원 선거는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③ 대통령 선거의 당선자는 중임할 수 없고, 지방 자치 단체의 장 선거의 당선자는 3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④ 국회 의원 선거의 비례 대표 의원 선거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지만, 지역구 의원 선거는 선거구마다 1명의 지역구 의원을 선출한다.

⑤ 지방 자치 단체의 장 선거, 기초 의회 의원 선거는 4년마다 동시에 실시한다.

5 선거 결과 분석

문제 분석 갑국은 현행 의회 의원 선거 제도에서 지역구 의원 250명, 비례 대표 의원 50명을 선출한다.

정답 찾기 가. 현행에서 유권자는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해 후보자에 1표를 행사하고, 비례 대표 의원은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비례하여 비례 대표 의석을 각 정당에 배분한다. 현행에서 비례 대표 의원 선출 시 지역구 의원 선거와 별도로 투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가 투표로 비례 대표 의원 선출을 직접 좌우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현행의 비례 대표 의원 선출 방식은 직접 선거에 위배될 수 있다.

나. <1안>의 경우, 정당 투표 득표율에 의회 전체 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에서 각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수만큼 비례 대표 의석을 각 정당에 배분한다. <1안>을 적용하더라도 정당 투표 득표율에 의회 전체 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보다 지역구 당선자 수가 크다면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하지는 않지만, 이에 따라 초과 의석이 생기고, 정당 투표 득표율과 의석률이 일치하

지 않는 정당이 있을 수 있다.

다. <2안>의 경우, 지역구 의원 선거 제도는 한 선거구에서 1인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서 한 선거구에서 2인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한다. 따라서 정당별 공천 인원 제한이 없다면 특정 정당이 한 선거구에서 최대 2명의 후보자를 당선시킬 수 있다.

6 선거 결과 분석

문제 분석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와 <개편안>을 적용한 의회 의원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행>

구분	A당	B당	C당	D당
의석수(석)	1	0	1	4
정당 득표율(%)	22.5	약 13.3	약 20.8	약 43.3
의석률(%)	약 16.6	0	약 16.6	약 66.6

<개편안>

선거구 1~6에서 각각의 총투표수를 100표로 가정하면, 정당별 득표수는 다음과 같다.

(단위: 표)

구분	A당	B당	C당	D당
선거구 1~2	40	35	35	90
선거구 3~4	35	10	40	115
선거구 5~6	60	35	50	55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할 때 선거구별로 2인이 당선 가능한 경우 2인을, 그렇지 않은 경우 1인을 공천하였다면 선거구별 최소 당선자와 최대 당선자는 다음과 같다.

구분	A당	B당	C당	D당
선거구 1~2	최대 1명, 최소 0명 당선	-	-	최대 2명, 최소 1명 당선
선거구 3~4	-	-	최대 1명, 최소 0명 당선	최대 2명, 최소 1명 당선
선거구 5~6	당선	-	-	당선
의석수	최대 2석, 최소 1석	0석	최대 1석, 최소 0석	최대 5석, 최소 3석

정답 찾기 가. 현행에서 A당, C당 모두 정당 득표율보다 의석률이 낮으므로 과소 대표된다.

다. 개편안에서 C당이 1석을 얻었다면, 선거구 3~4에서 D당은 1명이 당선되고, 선거구 1~2에서 최대 2명 당선, 선거구 5~6에서 1명 당선될 수 있으므로 D당은 최대 4석을 얻을 수 있다.

오답 피하기 나. B당은 현행과 개편안에서 각각 0석을 얻는다.
 르. 개편안 적용 시 얻을 수 있는 최대 의석수는 A당이 2석, C당이 1석이다.

7 선거 결과 분석

(문제 분석)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와 <개편안>을 적용한 의회 의원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행 선거 결과와 각 정당이 확보한 선거인단 수>

(단위: 명)

구분	선거인단	A당	B당	C당	D당
선거구 1	2	80	40	60	20
선거구 2	3	60	120	30	90
선거구 3	4	160	80	120	40
선거구 4	2	20	120	20	40
선거구 5	3	150	30	90	30
선거구 6	2	20	120	40	20
합계	16	490	510	360	240
의회 의원 의석수(석)		3	3	0	0
선거인단 수		9	7	0	0

<개편안>

구분	A당	B당	C당	D당
정당 득표율에 의회 의원 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	4.9	5.1	3.6	2.4
의회 의원 의석수(석)	5	5	4	2

정답 찾기 ④ 개편안에서 선출된 대통령의 소속 정당은 B당으로, B당이 의회 의원 선거에서 확보한 의석수는 5석이다.

오답 피하기 ① 현행 대통령 선거에서 A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수는 490명이고, B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수는 510명이다. 그러나 각 선거구에는 유권자 100명당 선거인단이 1명씩 배정되며 선거에서 해당 선거구의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그 선거구의 선거인단을 모두 확보하는데, A당 후보자가 확보한 선거인단 수는 9명, B당 후보자가 확보한 선거인단 수는 7명이다.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는 B당 후보자이지만, A당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② 현행 의회 의원 선거에서 A당과 B당이 확보한 의석수는 각각 3석으로 동일하다.

③ 개편안에서 B당의 후보자가 510표를 받아 대통령으로 선출되지만, 전체 유권자의 수는 1,600명이므로 과반의 표를 얻지는 않았다.

⑤ 현행 의회 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 단순 다수 대표제이며, 개

편안은 비례 대표제이다. 비례 대표제는 소선거구제에 비해 소수 정당 후보자들의 의회 진출에 유리하다.

8 선거 결과 분석

(문제 분석) t 시기에 A당이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였음에도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은 B당이므로 갑국의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이다. 갑국의 t 시기 지역구 선거 제도는 소선거구제, 단순 다수 대표제이고, t+1 시기와 t+2 시기 지역구 선거 제도는 중·대선거구제, 단순 다수 대표제이다.

정답 찾기 나. (가)가 1인이려면 t+1 시기에 B당은 38석, C당은 16석을 차지하였고, 선거구는 총 50개이므로 4개의 선거구에서 B당과 C당이 함께 당선된다.

르. t+2 시기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는 50개이지만 B당은 54석을 얻었으므로 B당은 2인 이상의 후보자를 공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나. 소선거구제와 달리 중·대선거구제는 동일 선거구 내에서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t 시기에 비해 t+1 시기의 선거 제도가 동일 선거구 내에서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을 강화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갑국의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이다. 단독 내각은 의원 내각제에서 하나의 정당이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여 다른 정당과 연합하지 않고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한 것을 말한다.

1 ㉔ 2 ㉕

1 선거 결과 분석

문제분석 t 시기에 갑국에서는 10개의 선거구에서 20명의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므로 갑국의 지역구 의원 선거 제도는 중·대선거구 제도이다. 을국에서는 10개의 선거구에서 10명의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므로 을국의 지역구 의원 선거 제도는 소선거구제이다. t 시기와 t+1 시기 갑국과 을국의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석)

구분	갑국			을국			
	A당	B당	C당	X당	Y당	Z당	
t 시기	지역구 의석수	10	4	6	5	3	2
	비례 대표 의석수	6	2	2	8	10	2
	전체 의석수	16	6	8	13	13	4
t+1 시기	지역구 의석수	5	2	3	0	0	0
	비례 대표 의석수	9	6	5	9	18	3
	전체 의석수	14	8	8	9	18	3

정답 찾기 ㉕ t+1 시기 을국 Y당의 의회 의석수는 18석으로 t 시기 갑국 B당의 의회 의석수인 6석의 3배이다.

오답 피하기 ①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동일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선거구 제도는 중·대선거구제이다. t 시기 지역구 의원 선거 제도는 갑국이 중·대선거구제, 을국이 소선거구제이다.

② t+1 시기에 을국의 X당과 Z당의 의회 의석수의 합은 12석이므로 의회 전체 의석수인 30석의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

③ 갑국의 A당의 의회 의석수는 t 시기에 16석, t+1 시기에 14석으로 줄었다. 갑국의 C당의 의회 의석수는 t 시기에 8석, t+1 시기에 8석으로 동일하다. 그러므로 C당의 의회 의석률은 증가하지 않았다.

④ t+1 시기에 을국은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지 않고, 의회 의원 전체를 비례 대표 의원 선거만으로 선출하기 때문에 의회 의원의 지역 대표성이 t 시기에 비해 t+1 시기에 강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선거 결과 분석

문제분석 갑국 의회 전체 의석수는 400석으로 지역구 의석수 200석, 비례 대표 의석수 200석이다.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있다.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석)

구분	A당	B당	C당	D당
지역구 의석수	38	90	52	20
비례 대표 의석수	22	130	28	20
총의석수	60	220	80	40

정답 찾기 ㄱ. <1안>의 경우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으로 절대다수 대표제를 채택하였다. 1차 투표에서 50% 초과 득표한 후보자가 없으면 1위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하여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1차 투표의 최다 득표자가 2차 투표에서 낙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ㄴ. <1안>과 달리 현행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동일 선거구 내 당선자 간 득표율 차이로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이다.

ㄷ. 현행에서는 B당이 의회 전체 의석수의 과반인 220석을 차지하고 있다. <2안> 적용 시 의회 제1당은 200석을 차지한 B당으로 의회 전체 의석수의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2안> 적용 결과와 달리 현행에서는 의회 전체 의석수의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존재한다.

08 정치 과정과 정치 참여

수능 기본 문제 본문 78쪽

01 ④ 02 ④ 03 ③ 04 ④

01 정치 과정의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는 ○○법 개정과 관련된 정치 과정 사례이다.

정답 찾기 나. 국회는 정책 결정 기구에 해당한다.

르. □□ 시민 단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등은 모두 정치 과정에서 정치 참여 주체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가. 시민 단체가 관련 법 마련을 촉구하는 것은 정치 과정 중 투입에 해당한다.

다.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의결되는 것은 정치 과정에서 산출에 해당한다.

02 언론의 기능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는 방송사가 탐사 보도를 통해 폐기물 처리장 문제를 다루었고, 이 보도로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실태 조사를 발표하며 국회도 청문회를 검토하게 된 사례이다.

정답 찾기 나. 언론 보도를 통해 폐기물 처리장 문제가 공론화되었고,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르. 언론이 주민들의 피해 사실을 보도하며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가. 공공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역할은 언론의 기능이 아니다.

다. 언론은 정부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03 정당 제도의 이해

문제 분석 (가)는 양당제, (나)는 다당제, (다)는 일당제이다.

정답 찾기 ③ 다당제에 비해 양당제는 다수당의 횡포로 소수의 이익이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오답 피하기 ① 다당제에 비해 양당제가 정당 간 대립 시 중재가 어렵다.

② 양당제에 비해 다당제는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④ 일당제에 비해 다당제가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기 용이하다.

⑤ 양당제, 다당제 모두 복수 정당제로서 민주적 정권 교체가 용이하지만, 일당제는 실질적인 정권 획득 가능성이 있는 정당이

하나만 존재하므로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 가능성이 낮아 민주적 정권 교체가 어렵다.

04 정치 참여 집단의 이해

문제 분석 A는 정당, B는 이익 집단, C는 시민 단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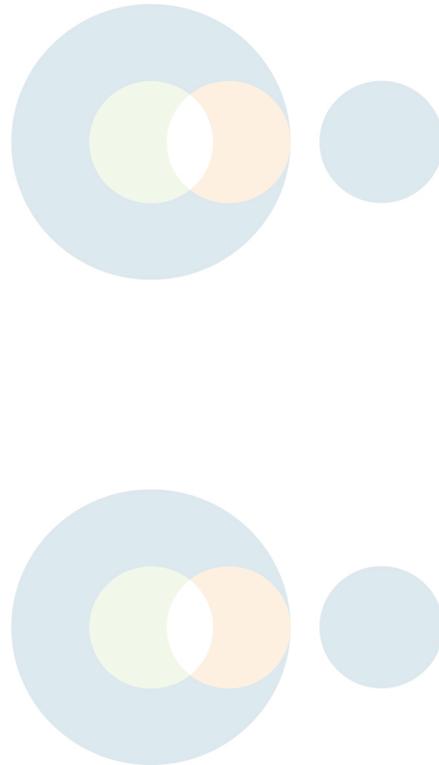
정답 찾기 ④ 이익 집단, 시민 단체 모두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오답 피하기 ① 공익보다 집단 구성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집단은 이익 집단이다.

② 의회와 행정부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집단은 정당이다.

③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는 집단은 정당이다.

⑤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모두 정치 과정에서 투입 기능을 한다.



- 1 ③ 2 ② 3 ④ 4 ④ 5 ④ 6 ③
7 ② 8 ④

1 정치 과정의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는 난임 치료 지원 확대를 요구하여 △△법이 개정된 정치 과정의 사례이다.

[정답 찾기] ③ 청원은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정치 참여 방법이다.

[오답 피하기] ① 난임 치료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캠페인은 정치 과정에서 투입에 해당한다.

② △△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정치 과정에서 산출에 해당한다.

④ 시민 단체, ○○당 모두 정치 과정에서 정치 참여 주체에 해당한다.

⑤ 국회, 지방 의회 모두 정치 과정에서 정책 결정 기구에 해당한다.

2 정당별 의석 분포 분석

[문제 분석] 갑국의 정당 제도는 양당제, 을국의 정당 제도는 다당제이다.

[정답 찾기] 가.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갑국에서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t 시기와 t+1 시기에 다르므로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도 다를 것이다.

다. 양당제에 비해 다당제는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오답 피하기] 나. 다당제인 을국에서 t 시기에 비해 t+1 시기에 a당과 b당이 차지하는 의석률이 감소하였다. 다른 정당의 의석률은 t 시기에 25%, t+1 시기에 54%이므로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이 감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르. 양당제에 비해 다당제가 다양한 민의를 국정에 반영하기 용이하다.

3 정치 참여 집단의 이해

[문제 분석] 갑은 1점, 을은 0점, 병은 2점을 받았다. A는 시민 단체, B는 이익 집단, C는 정당이다.

[정답 찾기] ④ (가)가 '시민 단체는 정치 과정에서 투입을 담당한다.'이면, (나)에는 틀린 내용이 들어가야 하므로 '이익 집단은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가 들어갈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시민 단체, 이익 집단 모두 집단 행동을 통해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② 이익 집단, 정당 모두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한다. (다)에는 틀린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다)에는 해당 내용이 들어갈 수 없다.

③ (라)에는 옳은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정당 모두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하므로 (라)에는 해당 내용이 들어갈 수 없다.

⑤ (다)에는 틀린 내용, (라)에는 옳은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시민 단체, 이익 집단과 달리 정당은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다)에는 해당 내용이 들어갈 수 없다.

4 정당 제도의 이해

[문제 분석] A는 양당제, B는 다당제이다.

[정답 찾기] ④ 을은 A와 B를 서로 바꾸어 설명했으므로 (다)에는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가 들어갈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양당제, 다당제 모두 정권 획득 가능성이 있는 정당이 두 개 이상이기 때문에 (가)에는 '정권 획득 가능성이 있는 정당이 하나만 존재한다.'라는 내용은 들어갈 수 없다.

② 다양한 민의 반영이 용이한 정당 제도는 다당제이므로 (나)에는 해당 내용이 들어갈 수 없다.

③ 근소 정당 난립 가능성이 높은 정당 제도는 다당제이므로 (나)에는 해당 내용이 들어갈 수 없다.

⑤ 정당 간 대립 시 중재가 용이한 정당 제도는 다당제이므로 (다)에는 해당 내용이 들어갈 수 없다.

5 정치 참여 집단의 이해

[문제 분석] A는 시민 단체, B는 정당, C는 이익 집단이다.

[정답 찾기] 나. 정당은 정권 획득을 위해 공직 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한다.

르. 시민 단체, 정당, 이익 집단 모두 사회적 쟁점에 대한 여론을 형성한다.

[오답 피하기] 가. 법률 개정 권한은 국회가 가진다. 시민 단체는 법률 개정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다. 이익 집단은 공익보다 특수 이익(사익)을 추구한다.

6 정치 과정의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는 일회용 플라스틱 문제를 둘러싼 정치 과정 사례이다.

[정답 찾기] 나. 선거는 정치 과정에서 정책 결정 기구의 정책 결정과 집행을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다. 주민 참여 예산 제안, 공청회 개최 모두 정치 과정에서 투입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가. 의회 의원이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단계적 사용 금지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해외 입법례를 조사한 것은 정책 결정을 준비하는 과정이므로 정치 과정에서 산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르. 정은 선거에서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는 방법으로 정치 참여를 하였다. 이는 선거권 행사에 해당한다.

7 정치 참여 방법의 이해

문제 분석 갑은 언론사 누리집 게시판에 글을 남기는 방법으로, 을은 정당에 가입하고 집회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병은 캠페인을 전개하는 방법으로, 정은 국회에 청원을 하는 방법으로 정치 참여를 하였다.

정답 찾기 ② 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위해 국민 등의 청원에 참여한 정은 정치 참여 방법은 사회권 보장을 요구하고자 절차적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① 을은 정당에 가입하고 집회에 참여하였다. 이는 선거권을 행사한 정치 참여 방법이 아니다.

③ 을은 정당에 가입하였고, 병은 친구들과 함께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므로 을과 병의 정치 참여 방법은 모두 집단적 정치 참여에 해당한다.

④ 갑은 언론사 누리집 게시판에 글을 남기는 방법으로 정치 참여를 하였고, 병은 학교 앞에서 친구들과 캠페인을 전개하는 방법으로 정치 참여를 하였다. 시·공간의 제약이 큰 정치 참여 방법은 병의 정치 참여 방법이다.

⑤ 국회에 청원을 하는 방법은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정치 참여 방법이다.

8 정치 참여 주체의 이해

문제 분석 A는 언론, B는 시민 단체, C는 이익 집단, D는 정당이다.

정답 찾기 ④ 정당과 달리 시민 단체, 이익 집단은 자신들의 행위에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① 시민 단체, 이익 집단 모두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② 언론, 이익 집단 모두 정치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한다.

③ 정당, 시민 단체 모두 공익을 우선시한다. 집단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정부에 의사를 표출하는 정치 참여 주체는 이익 집단이다.

⑤ 언론은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정당의 활동이나 입장을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기출 플러스

본문 83쪽

1 ⑤ 2 ④

1 정치 참여 집단의 이해

문제 분석 A는 정당, B는 이익 집단, C는 시민 단체이다.

정답 찾기 ⑤ 정당은 이익 집단, 시민 단체와 달리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조직된 정치 참여 집단이다.

오답 피하기 ①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는 모두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②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치 참여 집단은 정당이다.

③ 정책 결정 기구는 공공의 문제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을 의미한다.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는 모두 정책 결정 기구가 아니다.

④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는 모두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 기능을 한다.

2 정치 참여 집단의 이해

문제 분석 A는 정당, B는 이익 집단, C는 시민 단체이다.

정답 찾기 ④ 이익 집단과 달리 정당은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오답 피하기 ① 정당은 법률안을 발의하는 주체가 아니다.

② 정당은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한다.

③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모두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⑤ 이익 집단, 시민 단체는 모두 정책 결정 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09 민법의 기초

수능 기본 문제 본문 86~87쪽

01 ⑤	02 ④	03 ③	04 ②	05 ④	06 ①
07 ②	08 ⑤				

01 사법과 공법의 이해

[문제 분석] 개인 간의 사적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A는 사법, 개인과 국가 기관 간 또는 국가 기관 간의 공적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B는 공법이다.

- [정답 찾기]** ⑤ 민법은 사법, 형법은 공법에 해당한다.
- [오답 피하기]** ①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은 사회법이다.
- ② 범죄 행위로 인한 처벌은 공법인 형법, 형사 소송법에 의해 규율된다.
- ③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의 상속 순위는 사법인 민법에 의해 규율된다.
- ④ 헌법은 공법에 해당한다.

02 민법의 이해

[문제 분석] 소유권의 내용과 같은 재산 관계, 친족의 범위와 같은 가족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은 민법이다.

- [정답 찾기]** ㄱ. 민법은 원칙적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이 대등한 관계에 있다고 전제하며, 개인들이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자유롭게 법률관계를 형성해 나가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지원한다.
- ㄴ. 민법은 부부 관계, 가족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 등과 같은 가족 관계를 규율한다.
- ㄷ. 민법은 재산권의 개념과 대상, 계약, 불법 행위 등을 규정하여 개인의 경제 활동과 경제적 권리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 [오답 피하기]** ㄴ. 민법은 개인과 국가 기관 간의 공적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이 아니라 개인 간의 사적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에 해당한다.

03 민법의 규율 대상 이해

[문제 분석] 민법은 재산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 관계, 계약의 유형과 내용, 불법 행위 등과 같은 재산 관계, 부부나 자녀 등 가족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 관계, 혼인, 친권, 상속 등과 같은 가족 관계를 규율한다.

- [정답 찾기]** ㄴ. 친구에게 생일 선물을 주기 위해 상점에서 화장품

을 구입하는 것은 매매 계약으로서 민법이 규율하는 재산 관계의 사례로 적절하다.

ㄷ. 미성년자를 양자로 입양하는 것은 친자 관계를 형성하는 법을 행위로서 민법이 규율하는 가족 관계의 사례로 적절하다.

- [오답 피하기]** ㄱ.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되는 것은 민법이 규율하는 가족 관계의 사례이다.
- ㄷ.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행인을 실수로 치어 다치게 하는 바람에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불법 행위로서 민법이 규율하는 재산 관계의 사례이다.

04 민법의 기능 이해

[문제 분석] 민법은 제1편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등과 같은 법의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정답 찾기]** ② 민법은 법의 일반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생활 관계의 행위 기준을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 [오답 피하기]** ① 민법은 재산권의 사적 지배를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제시된 조항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민법의 기능으로 보기는 어렵다.
- ③ 국가 내 모든 법령의 제정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헌법의 기능이다.
- ④ 민법은 가족 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제시된 조항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민법의 기능으로 보기는 어렵다.
- ⑤ 국가 통치 조직을 구성하고 각 조직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의 기능이다.

05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 이해

[문제 분석] (가)는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나)는 사적 자치의 원칙, (다)는 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 [정답 찾기]** ㄴ. 사적 자치의 원칙은 개인 간의 법률관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계약이므로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 ㄷ.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는 근대 민법의 기본 이념이다.
- [오답 피하기]** ㄱ.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은 권리 행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보다는 자기가 소유한 재산에 대한 개인의 절대적 지배권을 중시한다.
- ㄷ. 행위자가 자기 행위로 인해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심리 상태를 '고의'라고 한다. 과실 책임의 원칙은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따른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도록 한다.

06 과실 책임의 원칙 이해

[문제 분석] 민법 제390조(채무 불이행과 손해 배상), 제750조(불법 행위의 내용)를 바탕으로 민법의 기본 원칙 중 과실 책임의 원칙을 파악할 수 있다.

정답 찾기 ① 자신의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과실 책임의 원칙은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오답 피하기 ② 계약 공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 ③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 ④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 ⑤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07 민법의 기본 원칙 이해

문제 분석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에 대한 수정·보완 원칙인 A는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고,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수정·보완 원칙인 B는 계약 공정의 원칙이다. C에 대한 수정·보완 원칙이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므로 C는 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정답 찾기 ②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에 따르면 개인의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하여야 한다.

오답 피하기 ①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은 모두 현대 사회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 ③ 계약 공정의 원칙은 개인이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 ④ 과실 책임의 원칙은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따른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도록 한다.
- ⑤ 과실 책임의 원칙은 사회·경제적 강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08 계약 공정의 원칙 이해

문제 분석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수정·보완 원칙은 계약 공정의 원칙이다.

정답 찾기 ⑤ 계약 공정의 원칙에 따르면 계약 내용이 사회 질서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①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에 부합하는 진술이다.

- ②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에 부합하는 진술이다.
- ③ 과실 책임의 원칙에 부합하는 진술이다.
- ④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부합하는 진술이다.

수능 실전 문제

본문 88~90쪽

1 ③ 2 ④ 3 ③ 4 ③ 5 ③ 6 ③

1 공법과 사법의 이해

문제 분석 국가 기관과 개인 간의 관계 및 국가 기관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인 A는 공법, 개인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인 B는 사법이다.

정답 찾기 나. 재산권의 종류, 계약의 종류와 내용을 규정한 법률은 민법이다. 민법은 사법에 해당한다.

다. 제시된 사례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인데, 이는 사법에 해당하는 민법에 의해 규율되는 사례이다.

오답 피하기 가.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은 사회법이다.

라. 공법, 사법 모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재판 규범으로 기능한다.

2 사적 자치의 원칙 이해

문제 분석 헌법 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사적 자치의 원칙에 입각한 자율적 거래 관계 형성을 왜곡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정답 찾기 ④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르면 개인은 자유로운 의사 표시의 합치에 따라 계약을 형성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을 수정·보완한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② 계약 공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③ 계약 체결 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계약 내용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 선택에도 적용된다.

⑤ 과실 책임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3 민법의 기본 원칙 이해

문제 분석 같은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였고, 을은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을 수정·보완한 원칙에 대해 설명하였다.

정답 찾기 ③ 개인이 자율적 판단에 따라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다. 해당 진술이 (가)에 들어갈 경우 A는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 되고, 옳지 않은 설명을 한 사람은 병이 된다.

오답 피하기 ① A가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이라면, 갑, 을의 설명이 모두 옳지 않게 되므로 A는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이 될 수 없다.

② A가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라면, 옳지 않은 설명을 한 사람은 갑이 아니라 병이 된다.

④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의해 수정·보완된 원칙은 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옳지 않은 설명을 한 사람이 갑이라면, 을과 병이 옳은 설명을 한 사람이 된다. 을은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을 수정·보완한 원칙에 대해 설명하였고, 해당 진술이 (가)에 들어간다면 병은 과실 책임의 원칙을 설명한 것이 된다. 이는 모순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을 한 사람이 갑일 때 해당 진술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⑤ 옳지 않은 설명을 한 사람이 병이라면, A는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고 (가)에는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 아닌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신의 행위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원칙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을 한 사람이 병일 때 해당 진술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4 계약 공정의 원칙 이해

[문제분석] 학습자가 단순 변심 또는 허위 과대광고 등으로 인해 수강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교습비 등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둔 것은 학원 운영자와 학습자 간의 자유로운 계약을 규제하는 성격이 있지만 학원 운영자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는 학습자가 일반적으로 위험을 떠안고 계약하는 상황을 막기 위함이다. 이는 계약 공정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정답 찾기] ③ 계약 공정의 원칙에 따르면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현저히 공정성을 잃은 내용의 계약은 무효이다.

[오답 피하기] ① 사적 자치의 원칙에 부합하는 진술이다.

②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에 부합하는 진술이다.

④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에 부합하는 진술이다.

⑤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부합하는 진술이다.

5 민법의 기본 원칙 적용 사례 분석

[문제분석] 공정 거래 위원회는 관련 법률을 토대로 부동산 매매 계약 관련 약관을 심사한 결과 불공정하여 무효로 판정된 사례를 발표함으로써 소비자가 부동산 거래 시 주의할 점을 환기하고자 하였다.

[정답 찾기] 나. 법률에 따라 무효로 판정된 사례들이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현저하게 부당한 내용임을 볼 때, 해당 법률은 계약 공정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다.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현저하게 부당한 내용의 계약을 바로 잡으려는 국가 기관의 개입이 나타나 있다.

[오답 피하기] 가. 부동산 매매 계약에도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된다.

라. 공무원 갑의 당부 사항은 부동산 거래 시 부당한 내용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다.

6 무과실 책임의 원칙 이해

[문제분석] 교사는 인과 관계나 가해자의 귀책 사유를 증명하기 어

려움을 고려해 원인 제공자에게 환경 침해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묻는 법률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률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A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정답 찾기] ③ 사회·경제적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할 필요성에 따라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을 수정·보완한 원칙이 등장하였다. 무과실 책임의 원칙은 그중 하나이다.

[오답 피하기] ①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②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④ 과실 책임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⑤ 계약 공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기출 플러스

본문 91쪽

1 ③ 2 ①

1 사적 자치의 원칙 이해

[문제 분석] 대법원은 항공 마일리지의 유효 기간을 10년으로 정한 약관이 고객들의 이익 보장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그 이익의 불균형 정도가 법률관계 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이르지 않는다고 때문에 사적 자치의 원칙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따라서 A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다.

[정답 찾기] ③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르면 개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타인과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에 부합하는 진술이다.

②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에 부합하는 진술이다.

④ 계약 공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진술이다.

⑤ 과실 책임의 원칙에 부합하는 진술이다.

2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이해

[문제 분석] 대법원은 합의에 위법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부동산 소유자로서 갑이 가지는 권리, 즉 소유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대법원 판단의 근거가 된 A는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이다.

[정답 찾기] ① 개인의 사유 재산권을 국가나 다른 개인이 침해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원칙은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이다.

[오답 피하기] ② 개인은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은 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③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르면 개인은 계약의 대상, 계약의 구체적 내용, 계약의 방법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④ 계약 공정의 원칙에 따르면 계약의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근거한다.

10 재산 관계와 법

본문 96~97쪽

수능 기본 문제

01 ① 02 ③ 03 ⑤ 04 ② 05 ① 06 ④
07 ④ 08 ③

01 계약의 이해

[문제 분석] 갑과 을은 중고 노트북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정답 찾기] ㄱ. 갑이 중고 노트북을 50만 원에 팔 것을 제안한 것은 청약, 을이 이에 동의한 것은 승낙에 해당한다.

ㄴ. 을이 갑의 제안에 동의함에 따라 청약과 승낙의 의사 표시의 합치가 이루어져 둘 사이에 계약이 성립하였다.

[오답 피하기] ㄷ. 갑과 을의 중고 노트북 매매 계약으로 어느 한쪽이 아니라 갑과 을 모두에게 일정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ㄹ. 갑이 50만 원을 을에게 주지 않는 것은 불법 행위가 아니라 채무 불이행에 해당한다. 만약 이로 인해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갑은 을에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02 계약의 성립과 효력 발생 요건의 이해

[문제 분석] 계약이 성립하여 법적 효력이 발생하려면 계약 당사자가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계약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 표시가 합치해야 하며, 계약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적법해야 하며, 강행 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만약 계약 당사자가 만취하여 의사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한쪽 당사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무효가 된다. 한편 계약은 구두 합의만으로도 성립 가능하고,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미성년자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찾기] ③ 옳은 답변을 한 학생은 을, 병이고, 옳지 않은 답변을 한 학생은 갑, 정이다.

03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이해

[문제 분석]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인 자로서 행위 능력이 제한된다.

[정답 찾기] ㄷ.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으로부터 돈을 갚지 않아도 뭍을 통보받고 수락(채무 면제)하는 경우처럼 단순히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ㄹ. 용돈은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사례로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ㄱ.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할 때에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의사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

니라 행위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본인도 취소할 수 있다.

04 미성년자의 계약 이해

[문제 분석]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이 제한되므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정답 찾기] ②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본인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권이 배제된다. 따라서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을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오답 피하기] ①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법률 행위는 일단 유효하지만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갑과 병의 계약이 무효인 것은 아니다.

③, ④ 을의 경우 동의를 위조하여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병이 믿게 하였으므로 취소권이 배제된다. 따라서 갑의 부모와 달리 을의 부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므로 병은 을의 부모에게 확답을 촉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⑤ 미성년자인 갑과 거래한 병이 계약에 대한 철회권을 행사하려면 계약 체결 당시 병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어야 한다.

05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 이해

[문제 분석] 법원은 사건 발생 당시 갑이 자기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였음을 근거로 판결하였다.

[정답 찾기] ① 심신 상실자는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데, 법원은 갑이 사건 발생 당시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보았다.

[오답 피하기] ②, ③, ④, ⑤ 손해 발생, 위법성, 고의나 과실,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갑에 대한 판결의 근거로 옳지 않다.

06 특수 불법 행위의 이해

[문제 분석] 법원이 갑에게는 A의 손해에 대해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병에게는 B의 손해에 대해 동물의 점유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답 찾기] ④ 동물의 점유자는 점유하는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더라도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하면 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오답 피하기] ①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은 감독 의무를 게을

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인정된다. 따라서 무과실 책임이 아니다.

②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은 특수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③ 을은 책임 능력이 없으므로 을의 행위는 불법 행위로 성립하지 않는다. 갑에게 인정된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은 을의 행위가 불법 행위의 다른 성립 요건은 갖추었으나 을에게 책임 능력이 없어 을의 행위가 불법 행위로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물을 수 있는 것인지, 을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게까지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⑤ 동물의 점유자가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해서 동물의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07 사용자의 배상 책임 이해

[문제 분석] 법원은 피용자 을이 업무상 과실로 손님 병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을을 고용한 갑에게 사용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정답 찾기] ④ 사용자의 배상 책임은 피용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법원이 갑에게 사용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갑의 피용자인 을의 행위가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을 갖추어 불법 행위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가해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간 상당인과 관계는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이다.

[오답 피하기] ① 갑의 배상 책임은 사용자의 배상 책임이며, 이는 특수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② 법원은 을의 행위가 불법 행위로 성립한다고 보았다. 가해 행위의 위법성은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이다.

③ 사용자의 배상 책임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상의 과실에 대해 지는 책임이므로 무과실 책임이 아니다.

⑤ 법원은 갑이 을에 대한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판단하였다면 갑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08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 이해

[문제 분석] 질문자는 건물 2층의 점유자, 갑은 건물의 소유자이다. 을은 건물 2층 난간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이다.

[정답 찾기] ㄴ. 공작물 등의 점유자는 공작물 등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된다.

ㄷ. 공작물 등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작물 등의 점유자가 책임이 면제되면 공작물 등의 소유자가 무과실 책임을 진다.

[오답 피하기] ㄱ. 공작물 등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작물 등의 점유자와 소유자가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ㄹ. 공작물 등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작물 등의 점유자가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1차적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따라서 건물 2층의 점유자인 질문자의 손해 배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면 피해자인 을은 건물 소유자인 갑에게 공작물 등의 소유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수능 실전 문제						본문 98~101쪽
1 ②	2 ①	3 ⑤	4 ⑤	5 ④	6 ②	
7 ⑤	8 ①					

1 계약의 이해

(문제분석) 갑은 을에게 돈을 빌려 쓴 후 정해진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

(정답찾기) ㄱ. (가)에서 갑은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청약을, 을은 이를 받아들이는 승낙을 하였다.

ㄷ. (가)에서 성립한 계약에 의해 을은 갑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고, 갑은 을에게 정해진 날짜에 빌린 돈을 갚을 의무가 발생하였다. (나)에서 을은 갑에게 그 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ㄴ. (가)에서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었으므로 계약이 성립하였다.

ㄹ. 빌려준 돈을 정해진 날짜에 갚지 않는 것은 불법 행위가 아니라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갑은 을에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2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자료는 미성년자인 갑, 병 각각의 매매 계약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이 제한되므로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용돈과 같이 법정 대리인에 의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단독으로 처분이 가능하다.

(정답찾기) ① 미성년자인 갑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자신의 용돈 범위 내에서 시집을 구매하였다. 이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해당하므로 갑과 을의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반면, 미성년자인 병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고가의 무선 헤드셋을 구매하였으므로 병 또는 병의 부모가 병과 정의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②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법률 행위는 일단 유효하지만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병의 부모뿐만 아니라 병도 병과 정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갑과 을의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고, 병과 정의 계약은 일단 유효하지만 병 또는 병의 부모가 취소할 수 있다. 병과 정의 계약이 무효인 것은 아니다.

④ 갑과 을의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므로 을은 갑과의 계약에 대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한편 정은 병과의 계약에 대해 병

의 부모가 추인할 때까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해당 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대상은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다. 따라서 정은 병과의 계약에 대해 병이 아니라 병의 부모에게 계약을 추인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 미성년자의 계약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자료는 미성년자인 갑, 을 각각의 매매 계약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이 제한되므로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찾기] ㄷ. 병은 계약 당시 갑, 을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ㄹ. 을은 계약을 체결할 때 속임수써서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병이 믿게 하였으므로 취소권이 배제된다. 따라서 병은 갑의 부모에게만 계약을 추인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ㄱ. 갑과 갑의 부모 모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ㄴ. 을과 을의 부모 모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 미성년자의 계약 이해

[문제분석]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미성년자 측에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임의로 계약을 취소하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조건에 따라 해당 추구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찾기] ⑤ 해당 추구권과 달리 철회권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병이 몰랐을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을이 일정 기간 내에 해당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이 된다.

②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을 추인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병은 갑에게 해당 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하였다고 해서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④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위조하여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미성년자 측의 취소권이 배제되므로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자료는 불법 행위가 성립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그 이유가 타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해 행위에 가해자의 과실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정답 찾기] ④ 제시된 자료에서 ‘평균인 또는 일반인의 능력으로 기울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정도의 주의를 태만히 하였는가’는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 중 과실과 관련되는 표현이다.

[오답 피하기] ①, ②, ③, ⑤ 가해자의 책임 능력, 가해 행위의 위법성, 가해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가해 행위와 피해자 손해 간의 상당 인과 관계는 모두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만 제시된 자료에서 논의하고 있는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6 사용자의 배상 책임과 동물의 점유자 책임 이해

[문제분석] 첫 번째 사례에서 법원은 피용자 을이 낸 사고에 대해 갑의 사용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두 번째 사례에서 법원은 병에게 동물의 점유자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정답 찾기] ② 을이 과실로 저지른 사고에 대해 비록 갑에게 사용자의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피해자 A는 사고를 낸 을에게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A는 을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③ 동물의 점유자 책임이 면제될 경우, 동물의 소유자가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④ (가)에는 갑에게 사용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들어가야 하므로 일반 불법 행위 성립 요건에 대해 판단하는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⑤ (나)에는 병에게 동물의 점유자 책임이 인정되는 이유가 들어가야 한다. 동물의 점유자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 아니다.

7 공작물 등의 점유자 책임 이해

[문제분석] 법원은 병이 입은 손해에 대해 갑에게 공작물 등의 점유자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정답 찾기] ⑤ 공작물 등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작물 등의 점유자가 1차적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이때 공작물 등의 점유자가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되는데, 사례에서 법원이 병의 손해에 대하여 건물의 점유자인 갑의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하였으므로 점유자의 면책 요건이 인정되지 않았음을 파악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갑은 병에게 공작물 등의 점유자 책임을 진다.

② 공작물 등의 점유자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 아니다.

③ 법원이 갑의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하면서 갑에게 고의가 있다고 보았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

④ 공작물 등의 점유자 책임은 점유하고 있는 공작물 등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손해에 대해 지는 책임이지, 자신이 감독해야 할 타인이 유발한 손해에 대해 지는 책임이 아니다.

8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 이해

문제분석 갑, 을, 병은 온라인 공간에서 허위 사실을 게시하고 유 포함으로써 정에게 정신적·재산적 손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갑, 을, 병은 정에 대해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을 진다.

정답 찾기 ①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에서 피해자는 불법 행위자들 중 한 사람에게만 손해액 전부를 청구할 수도 있고, 모든 가해자에게 과실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청구할 수도 있다.

오답 피하기 ②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불법 행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손해 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갑, 을, 병 모두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을 진다.

⑤ 갑, 을, 병 모두 책임 능력이 있으므로 갑, 을, 병의 부모가 각각 자기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는 경우 특수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기출 플러스

본문 102~103쪽

1 ② 2 ④ 3 ① 4 ③

1 미성년자의 계약 이해

문제분석 갑은 을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고, 을은 법정 대리인 병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정답 찾기 ② 갑은 을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오답 피하기 ①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구두로 약속한 계약 내용을 미이행하였다면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미성년자와 계약한 상대방은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응답을 촉구할 수 있다. 사례에서는 갑이 병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촉구할 수 있다.

④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법정 대리인이 해당 계약을 추인하면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되어 취소할 수 없다.

⑤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법정 대리인이 해당 계약을 취소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미성년자의 계약 이해

문제분석 갑은 나이를 20세로 위조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사기를 쳐서 을을 속이고 게임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써서 자신이 행위 능력자인 것처럼 믿게 한 경우 미성년자 측의 취소권이 배제된다.

정답 찾기 ④ 민법에 따르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을은 갑의 사기를 이유로 게임기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합치된 때 성립한다. 따라서 게임기 매매 계약의 성립 시점은 게임기를 건네받은 시점 이전이다.

②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써서 자신이 행위 능력자인 것처럼 믿게 한 경우 미성년자 측의 취소권이 배제되므로, 갑의 법정 대리인은 게임기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 계약에 대한 미성년자 측의 취소권이 배제되므로 갑과 거래한 을에게는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계약에 대한 미성년자 측의 취소권이 배제되면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추인도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을 추인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응답을 촉구할 권리가 갑과 거래한 을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채무 불이행과 불법 행위의 이해

(문제 분석) 갑은 복합 놀이 시설의 점유자이고, 을은 복합 놀이 시설의 소유자이다. 또한 갑은 피용자 병과 고용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이다.

정답 찾기 ① 사용자는 피용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더라도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된다.

오답 피하기 ②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공작물 소유자는 무과실 책임을 진다.

③ 근로 계약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무 불이행 책임이 성립한다.

④ 무는 책임 능력이 있으므로 정에게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⑤ 무는 책임 능력이 있으므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4 채무 불이행과 불법 행위의 이해

(문제 분석) 갑은 □□ 건물의 소유자이고, 을은 □□ 건물의 점유자이다. 병은 피용자 정을 직원으로 두고 있는 사용자이다.

정답 찾기 ③ 병은 직원 정이 무로부터 주문받은 대로 도시락 30개를 무에게 약속한 시간에 배달해 주었다. 따라서 병은 피용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사용자의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① 을이 □□ 건물의 점유자로서 안전망 설치 등 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병에 대해 공작물 등의 점유자 책임을 진다.

② 손해 배상 방식은 원상 복구가 아니라 금전 배상이 원칙이다.

④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정 대리인이 법정 감독 의무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는 해당 미성년자가 책임 능력이 없는 경우이다. 정은 미성년자이지만 17세로 책임 능력이 있으므로 정의 법정 대리인에게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⑤ 무가 병에게 명예 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명예 훼손으로 인해 병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1 가족 관계와 법

본문 108~109쪽

수능 기본 문제

- 01 ⑤ 02 ③ 03 ⑤ 04 ① 05 ① 06 ②
07 ⑤ 08 ④

01 혼인의 성립 요건과 법률 효과 이해

(문제 분석)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정답 찾기 ㄷ. 혼인을 하게 되면 배우자가 생기는 것과 함께 배우자의 친족과 인척 관계를 맺게 된다.

ㄹ. 사실혼은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하면서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형식적 요건인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다.

오답 피하기 ㄱ. '혼인 신고를 할 것'은 형식적 요건에 해당한다.

ㄴ. '혼인 가능한 연령일 것'은 실질적 요건에 해당한다.

02 혼인의 법률 효과 이해

(문제 분석) 혼인할 경우 부부는 일상 가사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일상 가사는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통상의 거래 행위를 의미한다.

정답 찾기 ㄴ, ㄷ. 가족이 먹을 식료품 구입이나 자녀의 합숙 훈련은 일상 가사의 사례로 적절하므로 빌린 돈에 대해 부부는 연대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오답 피하기 ㄱ. 혼인 전의 법률 행위는 부부의 일상 가사 채무의 연대 책임과 무관하다.

ㄹ. 도박은 일상 가사로 보기 어렵다.

03 이혼의 유형 이해

(문제 분석) 이혼의 유형 중 조정 절차를 거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재판상 이혼이다. 따라서 A는 재판상 이혼, B는 협의상 이혼이다.

정답 찾기 ⑤ 재판상 이혼, 협의상 이혼 모두 이혼 책임이 있는 쪽에게 상대방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원칙적으로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은 협의상 이혼이다.

②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존재해야 하는 것은 재판상 이혼이다.

③ 재판상 이혼, 협의상 이혼 모두 이혼이 성립하면 혼인에 의해 발생한 친족 관계가 소멸된다.

④ 행정 기관에 이혼 신고를 한 시점부터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협의상 이혼이다. 재판상 이혼은 이혼의 효력이 법원의 이혼 판결이 확정된 때 발생한다.

04 이혼의 법률 효과 이해

【문제분석】 이혼이 성립하면 부부 사이의 배우자 관계가 종료되므로 혼인을 전제로 한 동거 및 부양, 협조의 의무가 소멸된다. 또한 미성년인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 등과 그 자녀에게 면접 교섭권이 발생한다. 한편 일상 가사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혼인의 법률 효과이며, 이혼으로 인해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친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찾기】 ① 옳은 답변을 한 학생은 병, 정이고, 옳지 않은 답변을 한 학생은 갑, 을이다.

05 입양의 이해

【문제분석】 (가)에는 갑과 을이 무를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일반 입양)한 경우나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냐에 따라 답이 달라질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정답찾기】 ① 입양 이후 양부모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은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공통점이다.

【오답피하기】 ② 일반 입양의 경우 친생부모와의 친자 관계가 종료되지 않지만, 친양자 입양의 경우 친생부모와의 친자 관계가 종료된다.

③ 일반 입양의 경우와 달리 친양자 입양의 경우 입양된 자는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

④ 일반 입양된 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며, 친양자로 입양된 자는 가정 법원에 의해 친양자 입양이 받아들여지면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된다.

⑤ 일반 입양된 자와 달리 친양자로 입양된 자는 친생부모와의 친자 관계가 종료되므로 친생부모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없다.

06 친권의 이해

【문제분석】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의 권리와 의무인 A는 친권이다.

【정답찾기】 ㄱ.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신분·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친권의 행사자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 대리인이 된다.

ㄴ. 가정 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ㄴ. 민법은 법률혼을 한 미성년자를 성년자로 보므로 18세인 미성년 자녀가 법률혼을 하게 되면 친권이 소멸된다.

ㄷ.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은 부모의 공동 행사가 원칙인 것이 아니라 행사자를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거나 가정 법원이 지정한다.

07 유언과 상속의 이해

【문제분석】 사망한 사람의 재산은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이 있으면

그에 따라 분배되고,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이 없으면 상속이 이루어진다.

【정답찾기】 ㄷ. 갑의 직계 존속인 정은 상속 선순위인 직계 비속 병이 있으므로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한지와 상관없이 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ㄴ.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속 재산 중 일정 비율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갑이 비록 모든 재산을 병에게 준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겼지만, 을은 상속권자이므로 병에게 자기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ㄱ. 갑의 유언이 무효라면 상속이 이루어진다. 갑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자는 갑의 배우자인 을과 갑의 직계 비속인 병인데, 배우자는 공동 상속인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하여 상속받으므로 을은 6억 원, 병은 4억 원을 상속받는다.

ㄴ. 갑의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하면 그에 따라 재산이 분배되는데, 갑이 모든 재산을 병에게 준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겼으므로 을은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6억 원을 상속받지 못하고, 그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류분 제도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08 상속의 이해

【문제분석】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질 때 상속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이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이 2순위이다. 배우자는 1순위인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과 공동 상속인이 되고,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과 공동 상속인이 된다. 만약 피상속인에게 직계 비속과 직계 존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

【정답찾기】 ④ A와 혈연을 바탕으로 친자 관계가 형성된 C, D, 입양을 바탕으로 친자 관계가 형성된 E는 모두 A의 직계 비속으로서 상속 1순위에 해당한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상속이 이루어진다. A가 남긴 재산 9억 원은 B가 3억 원, C, D, E가 각각 2억 원씩 상속받는다.

【오답피하기】 ① A의 배우자인 B는 공동 상속인인 직계 비속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하여 상속받으므로 3억 원을 상속받는다.

② B의 상속분은 C의 상속분의 1.5배이다.

③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성별에 차등을 두지 않고 균등하게 상속이 이루어진다.

⑤ A의 직계 존속인 F는 A의 배우자 때문이 아니라 선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A의 직계 비속 때문에 상속을 받지 못한다.

- 1 ③ 2 ⑤ 3 ③ 4 ① 5 ③ 6 ④
7 ③ 8 ⑤

1 혼인의 이해

[문제 분석] 갑~무는 혼인의 성립 요건과 법률 효과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정답 찾기] ③ 일상 가사 대리권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를 배우자를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에서도 인정된다.

[오답 피하기] ① 혼인 가능 연령인 18세 이상일 것은 법률혼 성립을 위한 실질적 요건이다.

② 우리 민법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중혼이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의 혼인에 사실혼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18세의 미성년자가 법률혼을 하면 성년자로 보는 성년 의제는 혼인의 법률 효과 중 하나이다. 성년 의제는 민법, 상법과 같은 사법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공법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⑤ 법률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와 친생부모 간에 형성되는 친자 관계는 혈연을 바탕으로 한 친족 관계이므로 혼인을 통해 형성되는 인척 관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이혼의 유형 이해

[문제 분석] (가)에는 재판상 이혼과 협의상 이혼이 모두 '예'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하고, (나), (다)에는 두 가지 유형 중 하나만 '예'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정답 찾기] ⑤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협의상 이혼이고, 법원의 이혼 판결이 확정된 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재판상 이혼이다.

[오답 피하기] ① 민법에 정해진 이혼 사유가 존재해야 이혼할 수 있는 것은 재판상 이혼이다. 협의상 이혼은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므로 법에 정해진 이혼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

② 재판상 이혼, 협의상 이혼 모두 이혼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 대해 상대방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원칙적으로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은 협의상 이혼이다.

④ 재판상 이혼, 협의상 이혼 모두 이혼 당사자 중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해 분할 청구권을 가진다.

3 이혼의 법률 효과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그림에서 딸(병)을 키우며 살고 있는 부부(갑과

을)가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하기로 합의하자 갑의 남동생이 변호사를 찾아와 이혼에 관한 법적 조언을 부탁하였다.

[정답 찾기] 나. 이혼 시 미성년인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모 등과 그 자녀에게 면접 교섭권이 발생한다.

다. 이혼 당사자 중 한쪽은 다른 한쪽에게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권을 가진다. 이때 이혼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든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라면, 그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 상관없다.

[오답 피하기] 가. 갑과 을이 이혼하면서 어느 쪽이 병의 친권자로 정해지더라도 갑, 을 모두 병과의 친자 관계는 종료되지 않는다.

리. 갑과 을이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협의상 이혼을 진행할 경우, 행정 기관에 이혼 신고를 하기 전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친자 관계의 이해

[문제 분석] 친자 관계 형성에 인지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은 혼인 외 출생자이다. 친양자는 혈연을 기반으로 친자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아니다. 따라서 A는 친양자, B는 혼인 중 출생자, C는 혼인 외 출생자이다.

[정답 찾기] 가. 친양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종료된다.

나.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인지 절차를 거쳐 친자 관계가 형성되면 부모가 사망하였을 때 부모의 혼인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가진다.

[오답 피하기] 다. 양부모가 친권을 가지는 것은 입양을 통해 친자 관계가 형성된 경우이다.

리. 혼인 중 출생자, 혼인 외 출생자 모두 친생자에 해당한다.

5 혼인, 이혼, 입양의 이해

[문제 분석] 친부인 병과 자녀 정 의 친족 관계가 종료되는 입양은 친양자 입양이다.

[정답 찾기] ③ 갑이 정을 친양자로 입양하면 친부인 병과 정 의 친족 관계가 종료되므로 정은 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 된다.

[오답 피하기] ① 을과 병의 친족 관계는 이혼으로 이미 종료되었다.

② 갑과 을이 혼인한다고 해서 을의 자녀인 정과 을의 새로운 배우자인 갑 사이에 친자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④ 친양자 입양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양 전의 모든 친족 관계가 종료된다. 그런데 갑이 을과 혼인하면서 갑이 을의 자녀인 정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 정과 친부인 병의 친족 관계는 종료되지만 정과 친모인 을의 친족 관계는 종료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례가 입양 전의 모든 친족 관계가 종료되지 않는 특별한 경우이다.

⑤ 친양자로 입양되면 인지 절차 없이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된다.

6 가족 관계와 법 이해

문제 분석 친양자 입양은 양자가 미성년자임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C와 D는 19세인 갑을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일반 입양)하였다.

정답 찾기 ④ C와 D에게 일반 입양된 갑은 친생부모인 A, B와의 친족 관계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A의 유언이 없었더라도 A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이혼 시 자녀의 양육자와 친권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혼 후 C와 D가 갑을 입양하기 전 갑을 A가 양육하였다고 해서 B가 갑의 친권자가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해 인정되는데, 갑은 입양 당시 성년자였기 때문에 친권은 소멸된 상태이다.

③ C와 D는 갑을 일반 입양하였으므로 친생부모인 A, B와 갑의 친족 관계는 종료되지 않았다.

⑤ 입양으로 인해 C와 갑 사이에 친자 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갑은 C의 재산에 대해 1순위 상속권을 갖는 직계 비속이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7 유언의 효력에 대한 판례 분석

문제 분석 대법원은 ○○ 고등 법원과 달리 해당 사건의 경우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는 판결을 하였다.

정답 찾기 ③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유언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요건과 방식을 준수하였는지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해당 사건의 경우 유언의 효력 발생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판결문에 까다로운 유언 형식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대법원은 유언의 형식적 요건보다 유언자의 진의 확인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 아니라,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유언의 형식적 요건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④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 고등 법원에 환송한 것을 볼 때, ○○ 고등 법원은 사건의 유언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과 의견이 달랐음을 알 수 있다.

⑤ 유언이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법정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법정 상속권자들은 피상속인인 유언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된다.

8 가족 관계와 법 이해

문제 분석 갑과 을은 A를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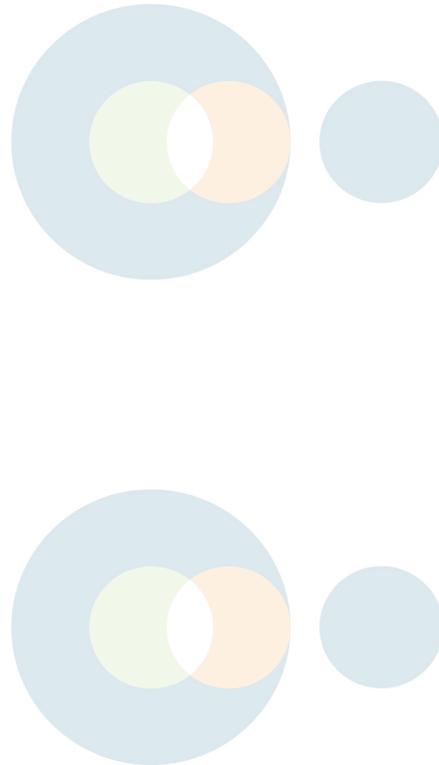
정답 찾기 ㄷ. 갑과 을은 이혼으로 인하여 친족 관계가 종료되었

으나, 친양자 입양을 통해 형성된 을과 A의 친자 관계는 종료되지 않았다. 따라서 을이 사망하면 갑과 달리 A는 을의 상속인이 된다.

ㄹ. 갑과 을이 A를 친양자로 입양함에 따라 친생부모인 병과 A의 친족 관계는 종료되었다. 따라서 병이 사망하면 직계 비속이 없으므로 직계 존속인 B는 재혼한 병의 배우자와 함께 병의 상속인이 된다.

오답 피하기 ㄱ. 갑과 을은 이혼 과정에서 가정 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의 확인을 받았으므로 협의상 이혼을 한 것이다.

ㄴ.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으로 인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면서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모은 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혼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든지, 그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든지 상관없다. 따라서 갑과 을은 서로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었다.



1 ④ 2 ③ 3 ④ 4 ②

1 가족 관계와 법 이해

[문제 분석] 병과 정은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하여 이혼을 하였으므로 협의상 이혼을 하였다. 한편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될 경우에는 친생부모와의 친자 관계가 종료되지 않는다.

[정답 찾기] ④ 병의 사망 시 친생자인 C는 병의 상속인이지만 병이 A, B를 입양하지 않았으므로 A, B는 병의 상속인이 아니다.

[오답 피하기] ① 갑의 사망 시 상속인은 배우자 을, 친생자 A, 친양자 B이다.

② 병과 정은 협의상 이혼을 하였으므로 행정 기관에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행정 기관에 이혼 신고를 한 후 정은 C에 대하여 면접 교섭권을 가진다.

③ 병의 사망 시 B, C 모두 A의 친족이다.

⑤ 을은 C를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하였으므로 C의 사망 시 정은 C의 상속인이다.

2 가족 관계와 법 이해

[문제 분석] 병과 정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이 아닌 상태에서 병이 정 의 자녀 C를 출산하였는데, 정은 인지 절차를 거쳐야 C와 친자 관계가 형성된다. 한편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될 경우에는 친생부모와의 친자 관계가 종료되지 않는다.

[정답 찾기] ③ 병은 갑과 법률혼을 한 후 A를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하였다. 따라서 정 의 사망 당시 친생부모인 갑, 을과 A 사이에 친자 관계가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재판상 이혼은 법원의 이혼 판결이 확정된 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정이 혼인 외 출생자인 C를 인지하지 않아 정과 C 사이에 친자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C는 정 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

④ A, B 모두 갑의 친생자이므로 B의 출생 당시 A와 B는 친족이다.

⑤ C의 출생 당시 병과 정은 법률혼 상태가 아니므로 친족이 아니다.

3 가족 관계와 법 이해

[문제 분석] 법률혼을 하게 되면 혼인 당사자는 배우자의 친족과 인척 관계를 맺게 된다. 한편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해 인정된다.

[정답 찾기] ④ 병과의 법률혼을 통해 정은 병의 자녀인 A와 인척 관계를 맺고 서로 친족이 된다.

[오답 피하기] ① 이혼 시 누가 자녀를 양육할지는 원칙적으로 부부

간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부부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법원이 정한다.

② 친양자로 입양된 자는 친생부모와의 친자 관계가 종료된다. 따라서 을의 사망 당시 A도 을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③ 갑과 병은 협의상 이혼을 하였으므로 행정 기관에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행정 기관에 이혼 신고를 한 후 병은 A에 대하여 면접 교섭권을 가진다.

⑤ B는 입양될 당시 19세로 성년자였기 때문에 친권은 소멸된 상태이다.

4 가족 관계와 법 이해

[문제 분석] 갑은 행위 능력이 있는 B의 동의를 받아 B를 적법하게 입양하였으므로 입양 당시 B는 성년자였다. 따라서 갑은 B를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하였다. 한편 법률혼을 하게 되면 혼인 당사자는 배우자의 친족과 인척 관계를 맺게 된다.

[정답 찾기] ② 병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B는 성년자이다. 따라서 B에 대한 을의 친권이 소멸된 상태이므로 을은 B가 병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오답 피하기] ① 을과 A 사이에 친자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갑과 을이 이혼할 때 C와 달리 A에 대해서는 친권자를 협의하여 정할 필요가 없다.

③ 갑과의 법률혼을 통해 을은 갑의 자녀인 A와 인척 관계를 맺고 서로 친족이 된다.

④ B는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되어 입양 전 친족 관계가 유지되므로, B가 양자로 입양된 때에도 병은 B와 친족이다. 한편 B가 양자로 입양된 때에 B, C 모두 갑, 을과 친자 관계가 형성된 자로서 서로 친족이 된다.

⑤ 갑의 사망 당시 갑과 친자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A, B, C 모두 직계 비속으로서 갑의 상속인이다.

12 형법의 이해

수능 기본 문제

본문 120~121쪽

01 ④ 02 ② 03 ④ 04 ③ 05 ③ 06 ④
07 ② 08 ⑤

01 형법의 의미 이해

[문제 분석] 형식적 의미의 형법은 '형법'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된 법률이며, 실질적 의미의 형법은 법의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범죄와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형벌과 보안 처분을 규정한 모든 법 규범이다.

[정답 찾기] 나. 실질적 의미의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모든 법률을 포괄하므로 조세법 처벌 규정이 포함된 조세법도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해당한다.

르. 형식적 의미의 형법, 실질적 의미의 형법 모두 죄형 법정주의가 적용되어 자의적인 형벌권 행사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

[오답 피하기] 가. 사법(私法)은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공법(公法)은 개인과 국가 기관 또는 국가 기관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한다. 형법은 국가와 범죄자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므로 공법(公法)에 해당한다.

다. 형식적 의미의 형법, 실질적 의미의 형법 모두 처벌에 대한 권한을 국가가 독점하고 있어 개인적인 보복과 응징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한다.

02 형법의 기능 이해

[문제 분석] (가)는 자의적 형벌권 남용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보장적 기능, (나)는 법의와 사회 윤리적 행위를 지키는 보호적 기능이다.

[정답 찾기] ② 형법의 보장적 기능은 국가가 행사하는 형벌권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 국민의 권리에는 범죄인의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도 포함된다.

[오답 피하기] ① (가)는 보장적 기능, (나)는 보호적 기능이다.

③ 형법에 규정된 형벌과 보안 처분은 모두 국가에 의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며, 형법은 개인적 보복을 금지한다.

④ 형법의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 모두 적법 절차의 원리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⑤ 형법의 보호적 기능은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03 죄형 법정주의의 이해

[문제 분석] 현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의 내용이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A는 근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 B는 현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에 해당한다.

[정답 찾기] ④ 현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법률의 내용에 실질적 정당성을 요구하여 부당한 법률에 의한 형벌권 남용을 방지한다. 반면, 근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입법자의 자의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오답 피하기] ① 근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법률의 내용을 문제 삼지 않아 부당한 법률에 의한 형벌권 남용을 방지하기 어렵다.

② 죄형 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이 성문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근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와 현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 모두 법적 안정성 보장에 이바지한다.

③ 근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와 현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모두 범죄와 그에 대한 법적 효과인 형벌이 행위자의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본다.

⑤ (가)에 해당 질문이 들어가려면 ㉠, ㉡ 모두 '예'이어야 한다.

04 죄형 법정주의의 이해

[문제 분석]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살인죄보다 더 무거운 법정형을 부과하는 것은 형벌 체계의 합리성 및 범죄 행위의 경중과 행위자가 부담해야 할 형사 책임 사이의 균형성을 저해한다. 따라서 A 원칙은 적정성(비례성)의 원칙이다.

[정답 찾기] ③ 적정성의 원칙에 대한 진술이다.

[오답 피하기] ①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에 대한 진술이다.

②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대한 진술이다.

④ 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진술이다.

⑤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에 대한 진술이다.

05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갑국의 형법 일부 조항을 통해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정답 찾기] 나. (나)는 행위 이후에 제정된 법률을 해당 법률 시행 이전의 행위에 소급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다. (다)의 '진정한 국민감정'이라는 표현은 구체적으로 처벌할 범죄 행위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불명확한 법률은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초래하여 국민의 사회생활에 대한 안정을 해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가. 형벌 법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가)를 근거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가)는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을 위반하고 있다.

ㄷ. (가), (나), (다) 모두 성문법에 근거하여 일정한 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06 범죄의 성립 요건 이해

[문제 분석] (가)는 구성 요건 해당성, (나)는 위법성, (다)는 책임이다. (가)~(다)가 모두 충족되어야만 범죄가 성립한다.

[정답 찾기] ④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긴급 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오답 피하기] ①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위라도 법률이 이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으면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다.

②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책임 조각 사유로 인정된다.

⑤ (가), (나), (다)가 모두 충족되어야만 범죄가 성립한다.

07 범죄의 성립 요건 이해

[문제 분석] 제시문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에 관한 논의로, 형사 미성년자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A는 범죄 성립 요건 중 책임에 해당한다.

[정답 찾기] ② 심신 상실자의 행위는 행위자에게 법적 비난 가능성이 없어 형법상 책임이 조각된다.

[오답 피하기] ① A는 책임이다.

③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형벌이 부과될 수 없다.

④ 행위가 전체 범질서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위법성의 문제에 해당한다.

⑤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한 법의 훼손은 형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인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한다.

08 형사 처벌의 종류 이해

[문제 분석] 보안 처분은 형벌을 대체 또는 보완하여 재범 방지 및 재사회화를 위해 부과되는 대안적 형사 제재이다. 따라서 A는 형벌, B는 보안 처분이다.

[정답 찾기] 을. 보안 처분은 형벌을 보완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형벌과 함께 부과되어도 이중 처벌 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병. 형벌은 행위자에게 책임이 있어야 부과되지만, 보안 처분은 책임이 없더라도 사회적 위험성이 인정되면 부과될 수 있다.

정. 형벌, 보안 처분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므로 적법 절차의 원칙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오답 피하기] 갑. 치료 감호법상 치료 감호는 보안 처분에 해당한다.

수능 실전 문제

본문 122~125쪽

- 1 ②
- 2 ③
- 3 ⑤
- 4 ⑤
- 5 ③
- 6 ⑤
- 7 ④
- 8 ④

1 형법의 의미와 기능 이해

[문제 분석]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은 비록 형법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해당한다.

[정답 찾기] ㄱ.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제137조에서 2년 이하의 징역(자유형)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재산형)을 규정하고 있다.

ㄷ. ㉠, ㉡ 모두 국가 형벌권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오답 피하기] ㄴ. 실질적 의미의 형법은 법의 형식을 불문하고 범죄와 그에 대한 법적 효과를 규정한 모든 법 규범을 의미한다. 따라서 ㉠, ㉡ 모두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해당한다.

ㄷ.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제1조에서 도시 환경 개선 및 주거 생활의 질 향상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할 것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다.

2 형법의 기능 이해

[문제 분석] 갑은 형법의 보호적 기능, 을은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정답 찾기] ③ 보장적 기능은 형법이 국가 형벌권의 한계를 규정함을 전제로 하여 자의적인 형벌권 행사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국가 형벌권의 확장에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범죄와 형벌을 성문 법률에 규정하려고 하는 죄형 법정주의를 통해 보장적 기능을 실현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갑은 형법의 보호적 기능, 을은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강조한다.

② 형법의 보호적 기능은 개인이나 공동체의 존립을 해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함으로써 개인적 법익,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것을 뜻한다.

④ 갑이 강조하는 형법의 기능도 사회적 법익을 보호함으로써 공동체의 존립과 사회 질서 유지를 도모하는 데 이바지한다.

⑤ 형벌권의 한계를 규정함으로써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범죄자의 인권도 보장하고자 하는 형법의 기능은 보장적 기능이다.

3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이해

[문제 분석] 대법원은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중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판결하였다.

[정답 찾기] ⑤ 자동차 관리법은 형벌의 책임 주체를 소유자로 명확

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등록상 소유자를 의미하는 문언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하급심이 등록상 소유자가 아닌 갑을 단지 실질적 소유자라는 이유로 처벌한 것은 명문 규정 없이 유사한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서 형벌 법규의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에 대한 진술이다.

②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대한 진술이다.

③ 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진술이다.

④ 적정성의 원칙에 대한 진술이다.

4 범죄의 성립 요건 이해

문제 분석 (가)는 정당방위, (나)는 긴급 피난, (다)는 피해자의 승낙, (라)는 자구 행위이다.

정답 찾기 ⑤ <진술 1> 경찰 공무원이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 현행범을 체포하는 행위는 범죄의 예방 및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공적 작용으로서 위법성 조각 사유인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 <진술 2> 운전자는 미끄러운 도로 위에서 앞에 있는 버스와 충돌이라는 급박한 위험을 피하려고 급제동을 하였고, 그 결과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 이는 다른 적절한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위험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중앙선 침범이라는 일정한 범익에 대한 침해라도 긴급 피난으로 인정된다. <진술 3> 피해자의 승낙은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A가 자신을 다치게 하는 것에 B가 동의했다라도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므로 피해자의 승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진술 4> 채무자가 외국으로 도망치려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를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행위이다. D가 출국하면 C는 돈을 받기 어려워지므로 C가 D를 경찰이 올 때까지 붙잡은 것은 권리 보호를 위한 긴급하고 불가피한 조치로, 이는 자구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5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이해

문제 분석 판결문의 첫 번째 법적 판단에서는 처벌 법규의 의미와 내용을 입법 목적과 전체적인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면 그 의미가 명확하다고 판시하고 있어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속 사건 조항이 명확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가)에 들어갈 원칙은 '명확성의 원칙'이다. 판결문의 두 번째 법적 판단에서는 갑의 게임머니 환전 영업이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로 보고 있으므로 (나)에 들어갈 원칙은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다.

정답 찾기 ③ 명확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국민은 처벌되는 행위를 미리 예견할 수 있으며 법적 안정성이 실현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제시문에서 적정성의 원칙 위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② 제시문에서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④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따라 사후 입법에 의한 부당한 처벌은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행위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규정된다면 소급효가 허용될 수 있다.

⑤ 명확성의 원칙은 국민이 자신의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며,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사후 입법에 의한 개인의 자유 침해를 방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실현한다. 따라서 두 원칙 모두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6 범죄의 성립 요건 이해

문제 분석 갑은 정당방위, 을은 긴급 피난, 병은 자구 행위로 각각 인정되어 모두 위법성이 조각됨으로써 범죄가 성립하지 않았다. 정은 공무 집행 방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의 구성 요건 해당성이 부정되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았다.

정답 찾기 ⑤ 정은 정의를 행하는 공무 집행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① 법원은 갑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였다.

② 을의 행위는 자신의 범익에 대한 현재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행위이다. 따라서 법원은 을의 행위를 긴급 피난으로 인정하고 위법성이 조각되었다고 보았다.

③ 병의 행위는 법정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A를 붙잡는 과정에서 다치게 한 행위로 자구 행위에 해당한다. 자구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이다.

④ 법원은 갑, 을, 병 모두에게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책임 조각과는 무관하다.

7 범죄의 성립 요건 이해

문제 분석 갑은 11세로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된다. 따라서 A는 책임이다. 을의 체포 행위는 절도범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나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이므로 정당 행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을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B는 구성 요건 해당성, C는 위법성이다.

정답 찾기 ④ 심신 장애로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었던 상태에서 행인을 폭행한 행위는 심신 상실자의 행위로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A는 책임, B는 구성 요건 해당성, C는 위법성이다.

②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정당 행위이다.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정당 행위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③ 자신의 생명에 대한 저항할 수 없는 협박에 의한 강요된 행위는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⑤ 정의 행위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며, 위법성 조각 사유와 책임 조각 사유가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나)에 들어갈 수 있다.

8 범죄와 형벌의 이해

문제 분석 1심 법원과 달리 2심 법원은 갑이 행인 A를 폭행한 행위에 대해 갑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정당방위로 인정하였다. 한편 을은 1심 법원과 2심 법원에서 모두 범행 당시 심신 상실 상태였음이 인정되었다. 정당방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이며, 심신 상실 상태는 책임 조각 사유이다.

정답 찾기 ㄱ. 징역, 금고 모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형이다. 그러나 징역은 수형자에게 노역의 의무를 부과하지만, 금고는 노역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ㄴ. 보안 처분은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범죄자를 재사회화하여 사회 복귀를 돕는 대안적 형사 제재 수단으로 보호 관찰, 치료 감호, 수강 명령, 사회봉사 명령 등이 있다. 그 중 치료 감호는 치료 감호 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는 보안 처분이다.

ㄷ. 갑의 행위가 법질서 전체 관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1심 법원과 달리 2심 법원은 갑이 행인 A를 폭행한 행위가 자기 보호를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정당방위를 인정하였다. 위법성이란 행위가 사회 전체의 법질서를 위반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가치 기준이며, 2심 법원은 정당방위라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인정함으로써 갑의 행위가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오답 피하기 ㄷ. 갑은 A를 폭행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받아 위법성이 조각되었다. 을은 마트 계산대를 부수고 진열된 상품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한 당시에 심신 상실 상태임을 인정받아 책임이 조각되었다. 따라서 법원은 을에게만 법적 비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출 플러스

본문 126쪽

1 ② 2 ④

1 범죄의 성립 요건 이해

문제 분석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하고, 위법성이 있으며, 행위자에게 책임이 존재해야 한다. A는 구성 요건 해당성, B는 위법성, C는 책임이다.

정답 찾기 ② 형법은 범죄 행위의 유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법률로 정해 놓은 범죄 행위의 유형을 범죄의 구성 요건이라고 한다. 이처럼 어떤 행위가 범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에 해당 행위가 법률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는 법률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이루어진 스토킹 행위는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① 소매치기 현장에서 도주하는 범인을 체포한 시민의 행위는 정당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심신 상실자와 같이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선고를 받은 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면 치료 감호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④ 과한이 흉기를 들고 생명을 위협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그를 밀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⑤ 화재로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자 부득이하게 옆집에 들어간 행위는 긴급 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이해

문제 분석 ○○법 조항은 '불량 만화'라는 개념이 불명확하므로 A는 명확성의 원칙이며, △△법 조항은 재범 음주 운전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B는 적정성의 원칙이다.

정답 찾기 ④ 적정성의 원칙은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의해 범죄와 형벌이 규정된 것에 그치지 않고, 범죄 행위의 경중과 행위자가 부담해야 할 형사 책임 사이에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오답 피하기 ① 관습법으로 범죄와 형벌을 정할 수 없다는 원칙은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이다.

② 적용할 형벌 규정이 없는 경우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유사한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은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이다.

③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다.

⑤ 적정성의 원칙은 현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에서 파생된 원칙이다.

13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수능 기본 문제

본문 131~132쪽

01 ④ 02 ④ 03 ⑤ 04 ③ 05 ④ 06 ①
07 ④ 08 ④

01 형사 절차의 이해

(문제분석) 수사, 공판, 형의 집행으로 이어지는 형사 절차와 각 단계의 법적 특징을 이해해야 한다. A는 공판, B는 수사, C는 형의 집행이다.

(정답 찾기) ④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수사와 공판 단계에서 모두 인정되는 권리이다.

(오답 피하기) ① 검사는 피고인과 더불어 형사 재판의 당사자이며, 형의 집행을 지휘한다.

② 수사 기관이 사건과 관련된 증거물을 소지자로부터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강제로 넘겨받는 행동은 압수이다. 헌법에서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에서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관이 발급한 영장을 요구한다.

③ 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모범적인 생활을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가석방 제도를 통해 형기 만료 전에 석방될 수 있다.

⑤ 모든 형사 절차에서는 적법 절차의 원칙이 적용되어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한다.

02 집행 유예와 선고 유예의 이해

(문제분석) 유죄 선고의 종류로서 집행 유예와 선고 유예가 있다. 두 선고는 유예된 기간이 지났을 때 가져오는 법적 효과에 차이가 있다.

(정답 찾기) ④ 을의 선고 유예는 해당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오답 피하기) ① 갑에게 선고된 징역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형에 해당한다.

② 집행 유예와 선고 유예는 모두 유죄의 판결로 무죄 취지의 판결이 아니다.

③ 집행 유예의 선고 효력이 상실되면 유예되었던 징역이 그대로 집행되며, 징역의 선고 자체가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다.

⑤ 유죄 판결이 확정된 갑과 을 모두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03 국민 참여 재판의 이해

(문제분석) A는 국민 참여 재판으로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 재판을 의미한다.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절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는다.

(정답 찾기) ⑤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판사는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을 참고할 뿐이며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피하기) ① 배심원은 특정한 조건을 제외하고 20세 이상의 일반 국민 중에서 선정한다.

② 피고인이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지 않거나 법원이 배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국민 참여 재판을 하지 않는다.

③ 국민 참여 재판은 형사 사건만을 대상으로 한다.

④ 국민 참여 재판은 지방 법원 및 지원 합의부 1심 사건에서만 담당한다. 따라서 단독 재판이나 2심에서는 국민 참여 재판을 할 수 없다.

04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호 원칙 이해

(문제분석) (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나)는 진술 거부권, (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 (라)는 적법 절차의 원칙으로 모두 형사 절차에서 인권 보장과 관련된 제도 및 원칙이다.

(정답 찾기) 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수사 및 공판 절차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는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를 근절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재판장은 재판을 시작하는 모두 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무고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인권 보장 사상을 바탕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라 수사와 재판 모두 원칙적으로 불구속으로 진행해야 한다.

(오답 피하기) 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 모두에서 인정되는 권리로, 피의자와 피고인이 수사 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되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라. 적법 절차의 원칙은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 등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공권력에 의해 제한될 때 반드시 법률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판사)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며, 이는 적법 절차의 원칙과 영장주의 원칙을 구현한 것이다.

05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 제도 이해

(문제분석) 수사 단계에서 적용되는 인권 보장 제도 중 (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 (나)는 보석 제도, (다)는 구속 적부 심사 제도이다.

(정답 찾기) 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는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절차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보다 신중하게 하도록 하는 장치이다.

ㄴ. 비록 구속 적부 심사에서 법원이 갑의 구속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도 이는 갑의 유·무죄 판단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갑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ㄷ. 구속은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가), (나), (다)와 같은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오답 피하기 ㄷ. 구속 적부 심사 제도는 피의자 신분일 때 활용할 수 있고, 보석 제도는 피고인 신분일 때 활용할 수 있다.

06 명예 회복 제도의 이해

문제 분석 (가)에 들어갈 제도는 '명예 회복 제도'이다.

정답 찾기 ① 명예 회복 제도란 무죄 판결로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 무죄 판결의 재판서를 법무부 누리집에 게재하여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피고인 등이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재판서를 1년간 게재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② 보석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③ 형사 보상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④ 배상 명령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⑤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07 소년 사건의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갑, 을, 병의 나이를 추론하고 소년 사건 절차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갑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형벌도 받을 수 있으므로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다. 을은 형벌을 받을 수 없지만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다. 병은 형벌과 소년법상 보호 처분 모두의 대상이 아니므로 10세 미만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ㄱ. 갑~병 중 가장 연장자는 갑이다.

ㄴ.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직접 가정 법원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

ㄷ. 사회봉사 명령은 소년법상 보호 처분으로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에 남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ㄷ. 기소 유예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피의자에게 적용되므로 형사 미성년자인 병에 대해서는 취할 수 없는 조치이다.

08 형사 피해자 등의 인권 보장 제도 이해

문제 분석 형사 피해자 등의 인권 보장 제도에는 형사 절차에 참여할 권리,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 형사 보상 제도, 배상 명령 제도, 명예 회복 제도 등이 있다. A는 배상 명령 제도, B는 형사 보상 제도이다.

정답 찾기 ④ 배상 명령 제도, 형사 보상 제도 모두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사법 경찰관으로부터 무죄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제도는 형사 보상 제도이다. 따라서 (가)에는 해당 내용이 들어갈 수 없다.

② 무죄가 확정된 사건의 재판서를 1년간 법무부 누리집에 게재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제도는 명예 회복 제도이다.

③ 형사 보상 제도는 국가에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며, 배상 명령 제도는 가해자에게 배상금 지급을 요구한다.

⑤ 형사 보상 제도는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사람이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는 등의 경우에 국가에 보상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했을 때 국가에 청구하는 제도는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이다.

수능 실전 문제

본문 133~136쪽

1 ③ 2 ③ 3 ④ 4 ② 5 ④ 6 ②
7 ② 8 ⑤

1 형사 절차의 이해

【문제분석】 형사 절차와 각 단계의 특징을 이해한다.

【정답 찾기】 ③ 자백 이외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판결은 재판의 중대한 오류이므로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을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무죄가 확정되면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갑은 현행범이므로 수사 기관은 체포 영장 없이도 갑을 체포할 수 있었을 것이다.

② 수사 과정에서 갑에 대해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으므로 갑은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절차를 거쳤을 것이다.

④ 갑, 을 모두에게 부여된 형벌은 자유형 중 징역으로 금고와 다르게 정해진 노역에 복무해야 한다.

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공판 단계뿐만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도 보장되는 권리이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이 보장된다.

2 형사 피해자 등의 인권 보장 제도 이해

【문제분석】 갑, 을, 병의 상황에 맞게 형사 피해자 등의 인권 보장 제도를 제시할 수 있다.

【정답 찾기】 나. 배상 명령 제도는 형사 재판 절차에서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해 민사적 손해 배상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로 피해자는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민사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간편하고 빠르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다. 병은 가해자가 도주 중이어서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경우 병은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를 통해 구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오답 피하기】 가. 갑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으므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더라도 형사 보상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르. 을, 병 모두 범죄 피해자로서 형사 재판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형사 재판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다.

3 형사 절차 단계의 이해

【문제분석】 형사 절차는 수사, 기소, 공판, 형 집행 순으로 이루어진다.

【정답 찾기】 ④ 소년법상 보호 처분은 가정 법원 소년부의 전속 권한

에 해당하므로 형사 법원은 A(17세)에게 직접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없다. 따라서 형사 법원은 심리 결과 A에 대하여 소년법상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가정 법원 소년부로 송치해야 하며 소년부는 심리 후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 명령 등 적절한 보호 처분을 결정한다.

【오답 피하기】 ① 수사는 고소, 고발 또는 수사 기관의 인지 등을 통해서 개시될 수 있다. 따라서 사건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의 고소가 없더라도 개시될 수 있다.

② 검사가 기소하면 수사를 받던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전환된다.

③ 국민 참여 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은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형의 집행은 검사의 지휘하에 진행된다.

4 형사 절차의 이해

【문제분석】 각 문제에 대한 갑, 을, 병 대답의 정오표는 다음과 같다.

구분	참가자	점수	이유
〈문제 1〉	갑	0	기소 유예 처분은 피의 사실이 인정되거나 피의자의 연령, 지능,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소추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것은 아니다.
	을	50	검사는 피의자의 연령, 환경,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하여 공소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병	50	검사는 수사 결과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객관적으로 충분하여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한 경우 공소를 제기한다.
〈문제 2〉	갑	50	B가 보증금을 납부하고 석방된 것은 보석 제도를 이용한 것이다.
	을	50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공판 절차와 수사 절차 모두에서 적용된다.
	병	50	B는 석방되었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문제 3〉	갑	0	해당 설명은 선고 유예에 관한 것이다. 집행 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을	0	아직 무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병	50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면 이는 유죄 판결에 해당한다.

【정답 찾기】 가. 문제를 다 풀 결과 갑은 50점, 을은 100점, 병은 150점을 획득하였다. 따라서 우승자는 병이다.

다. B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구속 기간에 대한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을이 이와 같이 판단하였다면 〈문제 3〉에

서 50점을 획득하여 총점이 150점으로 높아진다.

오답 피하기 나. 갑이 '검사는 A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였다.'라고 대답하였다면, 갑은 <문제 1>에서 50점을 획득하여 총점 100점을 얻는다. 그러나 여전히 병의 총점(150점)에 못 미치므로 우승자는 병으로 유지된다.

르. 법무부 누리집에 게재할 수 있는 사건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으로 제한된다. C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징역 선고 효력의 상실을 법무부 누리집에 게재할 수 없다. 병이 이와 같이 옳지 않은 법적 판단을 하였다면 <문제 3>에서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여 병의 총점이 100점이 되므로 을과 병의 총점은 같다.

5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호 원칙 이해

문제 분석 제시문을 분석하여 형사 절차에서 적법 절차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파악한다.

정답 찾기 ④ 1심 법원, 2심 법원 모두 갑에 대한 채혈이 영장 없이 이루어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거를 획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1심 법원, 2심 법원 모두 감정서를 절차 위반으로 얻어진 2차 증거로 보고 증거 능력을 부정하였다.

② 확정된 법원의 판결은 헌법 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1심 법원은 갑의 동의나 영장 없는 채혈과 혈중 알코올 농도에 관한 감정서 모두 증거 능력을 부정하여 갑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모든 재판에서 적용된다.

6 소년 사건 절차의 이해

문제 분석 형사 재판에 회부된 것을 통해 갑이 형사 미성년자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년 사건의 절차와 일반 형사 사건의 절차를 구별할 수 있다.

정답 찾기 가. 검사가 갑을 기소하였으므로 갑은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다. 따라서 갑은 14세 이상이다.

다. 가정 법원 소년부는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을 관할 지방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한다.

오답 피하기 나. 소년법상 보호 처분은 가정 법원 소년부에서 부과할 수 있는 처분으로 일반 형사 재판부에서는 부과할 수 없다.

르.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경우 검사와 피고인인 갑 모두 항소할 수 있다.

7 형사 재판 및 형의 선고 이해

문제 분석 갑과 을의 형사 재판 단계 및 형의 선고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한다.

정답 찾기 가.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유예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르. 집행 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오답 피하기 나. 국민 참여 재판 제도는 1심 합의부 재판에서만 가능하므로 단독 재판에서는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할 수 없다.

다. 재심 제도는 확정된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이므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 활용할 수 없다.

8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 제도 이해

문제 분석 형사 절차의 각 단계에서 피의자,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인권 보호 제도와 심급 제도를 이해한다.

정답 찾기 ⑤ 1심 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항고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영장주의에 따라 자택이나 회사 등을 압수·수색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관(판사)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② 체포·구속 적부 심사는 피의자가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③ 보석 제도는 재판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 제도로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법원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구속된 피고인이 석방되는 제도이다.

④ 피의자와 피고인은 진술 거부권이 보장되므로 수사 및 형사 재판 절차에서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기출 플러스

본문 137~138쪽

1 ② 2 ③ 3 ④ 4 ③

1 형사 절차의 이해

문제분석 형사 피해자인 갑이 활용할 수 있는 인권 보장 제도와 을과 병이 형사 피의자 및 형사 피고인 신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권 보장 제도와 관련된 법적 판단을 묻고 있다.

정답 찾기 ② 구속 적부 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당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하여 자신을 석방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피고인인 을은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오답 피하기 ① 검사가 을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을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여 영장을 발부한다.

③ 병이 집행 유예 기간 동안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④ 병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배상 명령 제도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민사적 손해 배상 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이다. 갑은 배상 명령 제도를 통해 을과 병으로부터 각각 고가의 화분이 깨진 손해와 폭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2 형사상 인권 보장 제도의 이해

문제분석 형사 절차 단계에 따라 갑이 활용할 수 있는 인권 보장 제도의 특징을 묻고 있는 문제이다.

정답 찾기 ③ 구속 적부 심사 제도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당한 피의자가 청구하는 제도이다. 피고인이 된 갑은 보석 제도를 활용하여 석방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우리나라는 구속 영장 발부 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신중하게 하고 있다. 법원은 피의자의 신청과 무관하게 피의자를 대면하여 심문하면서 구속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한다.

②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④ 징역은 교정 시설에 수용되어 정해진 노역을 부과하는 형벌이다.

⑤ 보석 제도는 재판 절차에서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석방되는 제도이다. 판결이 확정되어 형이 집행 중인 갑은 가석방 제도를 통해 형기 만료 전에 석방될 수 있다.

3 소년 사건의 이해

문제분석 갑은 18세로 형벌이 부과될 수 있으며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다. 을은 15세로 형벌이 부과될 수 있으며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다. 반면, 병은 12세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나 형사 미성년자로서 책임이 조각되어 형벌이 부과되지 않는다.

정답 찾기 나. 형사 미성년자는 형벌 부과 대상이 아니다. 형벌 부과 대상이 되려면 14세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12세인 병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다. 갑, 을, 병 모두 10세 이상 19세 미만이므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다.

오답 피하기 가. 형사 재판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다. 피해자인 정은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다.

4 형사 재판의 이해

문제분석 병은 14세 미만으로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병은 형벌 부과 대상이 아니고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답 찾기 ③ 병은 형사 미성년자로 형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기소 유예 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

오답 피하기 ① 갑은 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재판에 출석하여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판사는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여 심문한 후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무죄 추정의 원칙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적용된다. 정이 1심 법원에서 징역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지만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⑤ 정에게 선고된 징역이 확정되면 정은 노역에 복무해야 하며, 징역의 집행 중 누우침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가석방될 수 있다.

14 근로자의 권리

본문 141~142쪽

수능 기본 문제					
01 ②	02 ④	03 ③	04 ②	05 ③	06 ⑤
07 ②	08 ⑤				

01 사회법의 등장 배경 이해

- 문제 분석** A법은 사회법이다. 자본주의의 모순 심화에 따라 발생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법이나 사법만 존재하던 법 영역에 새롭게 사회법이 등장하였다.
- 정답 찾기** ② 사회법은 국가가 개인의 사적 영역에 개입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 초점을 둔다.
- 오답 피하기** ① 사회법은 재산권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함에 초점을 두지만 사유 재산의 국유화를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사회법은 국가의 시장 개입을 통한 규제에 초점을 두므로 시장의 자율성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사회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 평등을 추구한다.
- ⑤ 사회법은 개인 간의 법률관계인 사법적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공법적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하므로 계약 자유의 원칙 보장을 핵심 목표로 삼는 것은 아니다.

02 노동법의 이해

- 문제 분석** A는 근로기준법, B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다.
- 정답 찾기** ㄱ.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 조건에는 근로 시간, 휴일이 포함된다.
- 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입법 취지에는 부당 노동행위의 판단 기준이 되는 근로 3권이 명시되어 있다.
- ㄷ.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모두 사법과 공법의 중간 영역에 해당하는 사회법이다.
- 오답 피하기** 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모두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한다.

03 근로 계약의 이해

- 문제 분석** 고등학생 을은 18세이므로 연소 근로자가 아니다. 을이 갑과 맺은 근로 계약에 따르면 을의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매 근무일 1시간의 휴게 시간이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진다.
- 정답 찾기** ㄱ. 을의 근로 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고, 매 근무일 1시간의 휴게 시간이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지므로 근로 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 ㄴ. 을은 근로 기준법상 연소 근로자가 아니므로 갑은 을의 연령

을 증명하는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해 두지 않아도 된다.

오답 피하기 ㄴ. 을의 시간당 임금은 법정 최저 임금에 미달한다. 따라서 근로 계약 중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지만, 근로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04 부당 해고의 이해

- 문제 분석**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나 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 정답 찾기** ㄷ. '해고 30일 전에 해고 사유와 시기를 구두로만 통보한 뒤 해고한 사례'는 부당 해고에 해당하므로 (가)에 들어갈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ㄱ. 노동조합은 부당 해고가 근로 3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 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더라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그 해고는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05 연소 근로자의 근로 계약 이해

- 문제 분석**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갑과 을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갑과 을은 모두 19세 미만이거나 19세 이상이다. 두 명 모두 19세 이상일 수 없으니 갑과 을은 19세 미만이고, 병은 19세이다. '취업을 위해서는 고용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을 소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갑과 병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갑과 병은 모두 15세 미만이거나 15세 이상이다. 두 명 모두 15세 미만일 수 없으니 갑과 병은 15세 이상이고, 을은 14세이다. 따라서 갑은 17세, 을은 14세, 병은 19세이다.
- 정답 찾기** ㄱ. 연소 근로자인 갑을 고용하려면 사업장에 갑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ㄴ. 을은 연소자인 14세이므로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 채용될 수 없다.
- 오답 피하기** ㄷ. 병은 연소 근로자가 아닌 19세이므로 병의 근로 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

06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 행위의 이해

- 문제 분석** △△ 회사에 채용 면접을 보고 합격 통보를 받았으나, 이후 회사 내부 사정으로 채용 확정이 보류된 갑은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다. 해당 사례는 △△ 회사의 처분이 갑의 근로 3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지 않았다. A는 중앙 노동 위원회, B는 행정 법원이다.
- 정답 찾기** ⑤ 갑은 노동 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와는 별도로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② B는 행정 법원이다. 행정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③ 중앙 노동 위원회와 달리 행정 법원은 △△ 회사의 처분이 부당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④ 중앙 노동 위원회, 행정 법원 모두 △△ 회사의 처분이 갑의 근로 3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07 근로 3권의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는 근로자의 권리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설명하고 있다. A는 단체 교섭권, B는 단체 행동권, C는 단결권이다.

정답 찾기 ② 단체 교섭권의 대상은 근로 조건에 관한 것으로 제한되므로 단체 교섭권을 근거로 근로 조건과 무관한 회사의 경영 사항에 관해서는 사용자와 교섭할 수 없다.

오답 피하기 ①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섭에 응해야 한다.

③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④ 근로 3권의 주체는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단결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⑤ 헌법에 규정된 모든 근로 3권은 근로관계에서 경제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 근로 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08 연소자의 근로 계약 이해

문제 분석 을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17세이므로 연소 근로자이다.

정답 찾기 ⑤ 을이 연소 근로자이므로 갑은 을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오답 피하기 ① 을이 연소 근로자이므로 갑과 을이 합의하더라도 을은 매 근무일 1시간까지만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② 을은 15세 미만인 아니므로 고용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의 사본을 갑에게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③ 을은 갑에게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갑과 을의 근로 계약 내용에 따르면 주말은 을의 주휴일이 아니므로 을이 주말에 근무할 경우 갑은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수능 실전 문제

본문 143~145쪽

1 ③ 2 ① 3 ⑤ 4 ③ 5 ③ 6 ③

1 단체 행동권과 단체 교섭권의 이해

문제 분석 A는 단체 행동권, B는 단체 교섭권이다.

정답 찾기 ③ 근로자가 정당하게 단체 행동권을 행사하여 회사의 업무가 저해되어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근로자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오답 피하기 ① 근로자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동 조합을 결성하여 가입·활동할 수 있는 권리는 단결권이다. 따라서 ㉠은 을이다.

② 근로자는 단체 행동권을 근거로 파업, 태업과 같은 노동 쟁의를 할 수 있다. 직장 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 행위를 개시한 이후에 사용자가 대항하는 행위이다.

④ 근로자가 단체 교섭권을 행사할 때 사용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근로자 측의 교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⑤ 사용자가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모두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2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 행위의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사례에서는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 해고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A는 행정 법원이다.

정답 찾기 ㄱ. 중앙 노동 위원회는 △△ 회사의 처분이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반면, 행정 법원은 △△ 회사의 처분이 부당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오답 피하기 ㄴ. ○○ 지방 노동 위원회는 △△ 회사의 처분이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지 않았다.

ㄷ. 갑은 ○○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었다.

3 근로 계약의 이해

문제 분석 18세 미만인 사람을 고용하는 사용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므로 갑, 을 모두 18세 미만이거나 18세 이상이다. 갑, 을 모두 15세가 될 수 없으므로 갑과 을은 18세 또는 20세이고, 병은 15세이다.

정답 찾기 ⑤ ‘원칙적으로 당신의 근로 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가?’에 대한 갑과 병의 응답은 다르므로 해당 내용은 (나)에 들어갈 수 없다.

오답 피하기 ① 갑, 을 모두 연소 근로자가 아니므로 ㉠은 ‘아니요’이다.

② 병은 15세이므로 근로 계약 시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의 동

의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가)에 ‘같다’가 들어가면, 을과 병의 응답은 모두 ‘예’이고 을은 미성년자인 18세이다.

③ 갑, 을과 달리 연소 근로자인 병은 야간 또는 휴일 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④ 을, 병 모두 15세 이상이므로 ‘근로 계약을 위해 당신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을과 병을 구분할 수 없다.

4 근로 계약의 이해

(문제분석) 갑은 연소 근로자이고, 을은 성인 근로자이다. 근로 계약 내용에 따르면 갑의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1일 5시간 30분, 을은 1일 8시간이다. 갑의 임금은 을과 달리 법정 최저 임금에 미달한다.

(정답찾기) ③ 을의 근로 계약 내용에 따르면 일요일은 주휴일이 아니므로 사용자는 을에게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필요는 없다.

(오답피하기) ① 갑의 임금이 법정 최저 임금에 미달한다고 해서 근로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분에 한하여 법적 효력이 없다.

② 갑은 15세 미만인 아니므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④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근무 시 휴게 시간은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휴게 시간은 1시간 이상이다. 갑의 근로 시간은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고, 을의 근로 시간은 8시간이므로 갑과 을의 휴게 시간은 모두 근로 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⑤ 갑과 을 모두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5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 행위의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사례에서는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 해고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A는 지방 노동 위원회, B는 중앙 노동 위원회, C는 법원이다.

(정답찾기) ③ 법원은 갑의 행위에 대한 해고 처분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갑의 행위가 해고 처분이 필요할 만큼 중하지는 않다고 보았을 것이다.

(오답피하기) ① ㉠은 행정 소송에 해당한다.

② ○○ 회사가 C의 판결에 불복하면 고등 법원이 항소심을 관할한다.

④ 지방 노동 위원회, 중앙 노동 위원회 모두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⑤ 부당 노동 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3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제시된 사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갑은 ○○ 회사를 상대로 부당 노동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6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 행위의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사례에서는 B에 대한 해고가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정답찾기) ③ B는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는 것과는 별도로 A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A 회사는 □□ 행정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B와 A 회사의 노동조합은 모두 B의 해고에 대해 부당 노동 행위를 이유로 ○○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 지방 노동 위원회, □□ 행정 법원 모두 A 회사가 B의 근로 3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였다.

기출 플러스

본문 146쪽

1 ③ 2 ⑤

1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 행위의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사례에서는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지, 을에 대한 전보 조치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정답 찾기〕 ③ 부당 노동 행위의 경우 근로자뿐 아니라 노동조합도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갑은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갑은 노동 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 지방 노동 위원회, 중앙 노동 위원회 모두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⑤ □□ 지방 노동 위원회, 중앙 노동 위원회 모두 을에 대한 전보 조치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2 근로 계약의 이해

〔문제분석〕 갑과 을은 근로 계약 체결 시 취직 인허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모두 15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다. 병은 갑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둘 필요가 없으므로 갑은 18세 근로자, 을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이다. 갑은 자신에 대한 해고가 부당 해고이자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다.

〔정답 찾기〕 ⑤ □□ 지방 노동 위원회는 갑의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은 인용하였으나, 갑의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신청은 기각하였다. 즉, □□ 지방 노동 위원회는 갑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나 갑의 근로 3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병은 연소 근로자인 을에 대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을은 연소 근로자이므로, 병이 을의 근로 시간을 매 근무일 17시까지 1시간씩 연장하는 것은 을과의 합의가 있으면 근로 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근로 계약 내용에 따르면 일요일은 갑과 을의 근무일이므로 근로 기준법상 휴일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갑과 을이 근로 계약 내용대로 근무한다면 갑과 을의 일요일 근무에 대해 병이 지급해야 할 1일 임금 각각 84,000원이다.

④ 노동 위원회의 구제 절차와 별도로 갑은 병을 상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 소송인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5 국제 관계와 국제법

본문 150쪽

수능 기본 문제

01 ⑤ 02 ② 03 ④ 04 ①

01 국제 관계의 특징 이해

〔문제분석〕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회원국들이 파리 기후 협정을 채택하고,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지원을 약속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정답 찾기〕 ⑤ 자국의 경제적 부담이나 산업 구조를 고려하여 감축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동시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상호 협력을 위한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국제 사회에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앙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② 제시문에서 주권 평등의 원칙보다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제시문에서 주권 국가보다는 비정부 기구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제시문에서 경제적 실리 추구보다는 정치적 이념에 따른 대립이 강조되고 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02 국제법의 법원(法源) 이해

〔문제분석〕 ‘당사국 간 합의 절차를 명시적으로 거쳐야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가?’라는 질문으로 A와 B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C는 조약이다. ‘국제 사회에서 오랜 기간 반복되어 온 관행이 법 규범으로 승인되어 성립하는가?’라는 질문으로 B와 C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B는 법의 일반 원칙이다. 따라서 A는 국제 관습법이다.

〔정답 찾기〕 ② ‘국내 문제 불간섭’은 국제 관습법의 사례이다.

〔오답 피하기〕 ① 국제 관습법은 원칙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포괄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③ 조약이 우리나라에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④ 국제 관습법, 조약 모두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⑤ 국제 사회의 문명국들이 공통적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은 법의 일반 원칙이므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03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문제분석〕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갑의 관점은 자유주의적 관점,

을의 관점은 현실주의적 관점에 해당한다.

정답 찾기 나. 현실주의적 관점은 국제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 세력 간 힘의 균형을 강조한다.

르. 현실주의적 관점과 달리 자유주의적 관점은 집단 안보 체제를 통한 국제 평화 보장이 가능하다고 본다.

오답 피하기 가. 현실주의적 관점은 국가 간 경쟁이나 갈등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디. 자유주의적 관점은 국제 사회에서 힘의 논리가 통용된다는 점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04 국제 관계의 변천 과정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는 국제 관계의 변천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사건이다. (가)는 1980년대 후반 냉전 체제의 종식, (나)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냉전 체제의 형성, (다)는 1930~1940년대 제2차 세계 대전의 발발, (라)는 냉전 체제가 형성된 가운데 비동맹 외교 노선을 추구하는 국가들의 등장이다.

정답 찾기 ① 냉전 체제가 종식되고 탈냉전 시대가 개막하면서 국제 사회에서는 이념보다는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오답 피하기 ② 트루먼 독트린은 양극 체제의 성립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③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가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 연합이 설립되었다.

④ 비동맹 외교 노선을 추구하는 국가들의 등장은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냉전 체제가 약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⑤ 시기 순으로 나열하면 (다) → (나) → (라) → (가) 순이다.

수능 실전 문제

본문 151~153쪽

1 ① 2 ③ 3 ⑤ 4 ② 5 ① 6 ④

1 국제 관계의 특징 이해

문제 분석 제시문은 시리아 내전이 정부군과 반군의 대립에서 출발하였으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다양한 국내의 세력이 개입하면서 사안별로 협력과 대립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정답 찾기 ① 미국, 쿠르드족, 튀르키예, 러시아, 시리아 정부군, 이슬람 국가 사이에 다층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사안별로 협력과 대립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②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일관된 외교 기조가 유지되지 않고, 장기적인 협력 관계가 형성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자국의 이익을 고려하여 협력과 대립을 선택하고 있으므로 자국의 이익보다 국제 사회의 정의 실현을 우선시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제시문에서는 국가 간 동맹이 명확하게 형성되어 이를 바탕으로 일관된 협력과 대립이 지속되기보다는 사안에 따라 협력이나 대립을 선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⑤ 제시문에서 국가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군사적 개입보다 외교적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2 국제법의 법원(法源) 이해

문제 분석 1번 문항에서 0점을 얻었으므로 B는 조약이 아니라 국제 관습법 또는 법의 일반 원칙이다. 2번 문항에서 2점을 얻었으므로 C는 국제 관습법이다. C가 국제 관습법이므로 B는 법의 일반 원칙, A는 조약이다.

정답 찾기 ③ 3번 문항에서 1점을 얻으려면 (다)에는 국제 관습법과는 다른 조약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서술이 들어가야 한다. 개인은 조약의 체결 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 개인도 체결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은 (다)에 들어갈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1번 문항에서 0점을 얻으려면 (가)에는 조약과는 다른 법의 일반 원칙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서술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국제 사회의 문명국들이 공통적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임.'은 법의 일반 원칙의 특징이므로 (가)에 들어갈 수 없다.

② 2번 문항에서 2점을 얻으려면 (나)에는 법의 일반 원칙과는 다른 국제 관습법의 특징으로 옳은 서술이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모든 국가에 대해 보편적 효력을 가짐.'은 법의 일반 원칙과 국제 관습법 모두에 해당하는 특징이므로 (나)에 들어갈 수 없다.

- ④ 우리나라에서 조약에 대한 비준권은 대통령이 가진다.
- ⑤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모두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준거가 될 수 있다.

3 국제법의 법원(法源) 이해

(문제분석) 원칙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포괄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국제 관습법이므로 A는 국제 관습법, B는 조약이다.

(정답 찾기) 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국제 관습법 등)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가)에는 해당 내용이 들어갈 수 없다.

(오답 피하기) ①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은 법의 일반 원칙 사례이다.

- ② 국제기구, 국가 모두 조약의 체결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③ 국제 관습법은 오랜 기간 반복된 관행이 법 규범으로 승인되어 효력을 가지게 된다. 반면, 조약은 일반적으로 문서의 형태로 작성되며 문서에는 조약의 목적과 조항, 비준 일자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그 내용과 성립 시기가 분명하다.
- ④ 국제 관습법, 조약 모두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준칙이 되므로 (가)에는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준칙이 되는가?’가 들어갈 수 없다.

4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문제분석) A는 현실주의적 관점, B는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정답 찾기) ② 자유주의적 관점은 국제 사회에서 보편적 규범과 이성이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오답 피하기) ① 자유주의적 관점은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역할을 중시한다.

- ③ 현실주의적 관점은 국가 간 힘의 균형을 통해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
- ④ 자유주의적 관점은 국제 사회가 침략 행위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할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 ⑤ 현실주의적 관점과 달리 자유주의적 관점은 국제 규범을 통해 국제 사회의 부정부 상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5 국제 관계의 변천 과정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연표는 국제 관계의 변천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사건을 보여 준다.

(정답 찾기) ① (가) 시기에는 베스트팔렌 조약의 체결로 등장한 주권 국가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었다.

(오답 피하기) ②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양극 체제가 확립된 것은 (라) 시기이다.

- ③ 미국과 소련 어느 쪽의 노선도 따르지 않으면서 독자적인 비동맹 외교 노선을 추구하는 제3세계 국가들이 부상한 것은 (라) 시기 이후이다.

- ④ 냉전 체제가 종식되며 탈냉전 시대로 전환된 것은 (마) 시기 이후이다.

⑤ 전체주의 국가에 의해 세계 대전이 발발한 것은 (나) 시기이다.

6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문제분석) 갑의 관점은 자유주의적 관점, 을의 관점은 현실주의적 관점이다.

(정답 찾기) ④ 자유주의적 관점은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이 조화될 수 있다고 본다.

(오답 피하기) ① 현실주의적 관점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동맹 및 군사력 강화를 강조한다.

- ② 자유주의적 관점은 집단 안보 체제를 국제 평화 실현의 방안으로 본다.
- ③ 현실주의적 관점과 달리 자유주의적 관점은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⑤ 현실주의적 관점과 달리 자유주의적 관점은 국제 사회에서 국가들이 지켜야 할 보편적 선(善)이 존재한다고 전제한다.

1 국제법의 법원(法源) 이해

문제 분석 국제법의 법원(法源) 중 A는 조약, B는 국제 관습법이다.

정답 찾기 가. 조약은 국가뿐 아니라 국제기구도 체결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나.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체결·비준한 조약보다 헌법이 우위에 있다.

오답 피하기 다.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은 모두 국제법의 법원(法源) 중 법의 일반 원칙의 예이다.

르. 국제 사법 재판소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국들이 합의하여 분쟁 해결을 요청한 사건에 대해서만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2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문제 분석 A는 자유주의, B는 현실주의이고, ①은 조약에 해당한다.

정답 찾기 ② 국력 증강, 동맹 등을 통한 세력 균형 전략을 강조하는 현실주의적 관점은 국가 간 힘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국제 분쟁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오답 피하기 ① 자유주의적 관점은 국가 간 협동에 따른 국제 사회의 집단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본다.

③ 현실주의적 관점은 국제 사회의 무정부성을 전제하며 국가를 국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간주한다.

④ 국가와 국제기구는 모두 조약의 체결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⑤ 조약은 원칙적으로 체결 당사자 간에만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16 국제 문제와 국제기구

수능 기본 문제

본문 157쪽

01 ① 02 ⑤ 03 ③ 04 ①

01 국제 문제 사례 분석

문제 분석 제시문은 미등록 이민자에 대한 단속과 추방 강화 문제를 보여 준다. 미등록 이민자에 대한 단속과 추방 강화 문제는 이민자의 출신 국가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와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정답 찾기 ① 미국의 정책 변화가 중남미 국가, 중남미 국가와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② 미등록 이민자에 대한 단속과 추방 문제는 경제적 실리보다는 정치적 이념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보기 어렵다.

③ 미등록 이민자에 대한 단속과 추방 문제는 한 국가 내의 종교적 갈등이 국가 간의 외교적 마찰로 이어지는 문제로 보기 어렵다.

④ 미등록 이민자에 대한 단속과 추방 문제는 사회 구성원 간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국제적 긴장을 초래하는 문제로 보기 어렵다.

⑤ 미등록 이민자에 대한 단속과 추방 문제는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국제 사회가 개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보기 어렵다.

02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이해

문제 분석 A는 총회, B는 안전 보장 이사회이다.

정답 찾기 ⑤ 총회, 안전 보장 이사회 모두 국제 사법 재판소 재판관의 선출권을 가지므로 (가)에는 해당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안전 보장 이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관한 일차적 책임을 지는 국제 연합의 실질적 의사 결정 기관이다.

②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5개국으로 고정되어 있다.

③ 총회는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최고 의결 기관이다.

④ 안전 보장 이사회는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당사국에 대한 제재를 결정할 수 있다.

03 국제 문제의 해결 방법 이해

문제 분석 제시문은 대인 지뢰로 인한 민간인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비정부 기구들의 노력을 보여 준다.

정답 찾기 ③ 국제 비정부 기구들이 국제 여론을 형성하고 정부의 대응을 압박한 것은 세계 시민 사회의 국제적 연대 활동을 통한 해결 방식이다.

오답 피하기 ① 제시문에서 강대국의 군사적 개입을 통한 해결 방식이라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② 제시문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협상으로만 문제를 해결한 방식이라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④ 제시문에서 다국적 기업이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문제를 해결한 방식이라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⑤ 제시문에서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유명 인사의 중재를 통한 해결 방식이라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04 우리나라 외교 정책의 변천 이해

(문제 분석)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은 1950년대에는 (가)와 같이 냉전이 강화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 진영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에 주력하였고, 1970년대에는 (다)와 같이 미국과 중국이 수교하는 가운데 일부 사회주의 국가에 문호를 개방하였고, 1990년대에는 (나)와 같이 경제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정답 찾기 ㄱ. 1950년대에는 반공 진영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오답 피하기 ㄴ. 북방 외교를 통해 공산권 국가와의 수교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이다.

ㄷ. 자유 무역 협정의 확대를 통한 전 세계적 경제 협력을 추구한 것은 2000년대 이후이다.

수능 실전 문제

본문 158~159쪽

1 ②

2 ④

3 ③

4 ③

1 국제 문제의 해결 방법 이해

(문제 분석) 첫 번째 사례는 ‘굿 프라이데이 협정’ 체결을 통해 북아일랜드의 신교도와 구교도 간 종교적·정치적 갈등을 해결한 사례이다. 두 번째 사례는 평화 협정 체결을 통해 에콰도르와 페루 양국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한 사례이다.

정답 찾기 ② 북아일랜드의 종교적·정치적 갈등과 에콰도르와 페루의 국경선 분쟁은 모두 평화적인 협상과 합의 과정을 통해 국가 간 장기간의 분쟁을 해결한 사례이다.

오답 피하기 ① 국제기구의 결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였다는 내용은 제시문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③ 이념에 기반을 둔 동맹 강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였다는 내용은 제시문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④ 특정 국가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였다는 내용은 제시문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⑤ 국제법을 기반으로 한 군사적 개입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였다는 내용은 제시문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2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이해

(문제 분석) A는 국제 사법 재판소이다. 국제 사법 재판소는 서로 국적이 다른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고,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당사국을 직접 제재할 수 없다.

정답 찾기 ㄴ. (가)에는 국제 사법 재판소에 대한 옳지 않은 진술이, (나)에는 국제 사법 재판소에 대한 옳은 진술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 ㉡은 모두 갑이다.

ㄷ. 국제 사법 재판소는 강제적 관할권을 갖지 않으므로 (나)에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국이 모두 분쟁 해결에 합의한 경우에만 재판 관할권을 갖습니다.’가 들어갈 수 있다.

오답 피하기 ㄱ. 국제 사법 재판소는 법의 일반 원칙을 재판의 준거로 활용할 수 있다.

ㄷ. 개인은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가)에는 국제 사법 재판소에 대한 옳지 않은 진술인 ‘국가는 물론 개인도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가 들어갈 수 있다.

3 우리나라 외교의 방향 이해

(문제 분석) 제시문은 국제 문제의 해결 방법인 외교적 해결 방법으로 가치 중심적 접근과 이익 중심적 접근을 보여 준다.

정답 찾기 ㄴ. 가치를 무시한 이익 중심적 접근은 장기적으로 국가의 신뢰와 위상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통해 도덕적 기준을 배제한 자국의 이익 추구는 국제 사회에서 국가의 신뢰 하

락을 초래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ㄷ. 단기적인 이익에 집중하면 당장의 갈등을 피할 수 있으나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의 구축에는 한계가 있으며,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실용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가치에 근거한 이익 중심적 접근을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국제 협력 관계 형성을 위해 현실적인 결과와 함께 도덕적 기준을 고려해야 함을 파악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ㄱ.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제 규범과 가치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내용은 제시문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ㄴ. 국가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도덕적 기준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은 제시문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4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이해

(문제 분석) A는 총회, B는 안전 보장 이사회이다.

정답 찾기 ③ 안전 보장 이사회를 구성하는 15개국 중 10개국은 비상임 이사국으로 2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오답 피하기 ① ㉠은 조약으로 체결 당사자 간에만 구속력을 가지는 법원(法源)에 해당한다.

②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전체 15개 이사국 중 최소 9개국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때 5개 상임 이사국 중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의안은 부결되므로, 주어진 사례에서는 5개 상임 이사국이 모두 ㉠에 찬성했음을 알 수 있다. 찬성한 이사국은 총 10개국이므로, 나머지 5개국은 비상임 이사국에 해당한다. 따라서 찬성한 상임 이사국과 비상임 이사국은 각각 5개국으로 같다.

④ 총회, 안전 보장 이사회 모두 국제 사법 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선출 권한을 가진다.

⑤ 안전 보장 이사회의 표결 방식에는 힘의 논리가 반영되어 있다.

기출 플러스

본문 160쪽

1 ⑤ 2 ②

1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이해

(문제 분석) 국제 연합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 A는 총회, B는 안전 보장 이사회이다.

정답 찾기 ㄱ. 국제 연합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인 총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는 주권 평등의 원칙에 따라 1국 1표로 표결한다.

ㄴ.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절차 사항을 제외한 모든 실질 사항에 대한 결정은 상임 이사국 전체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상임 이사국 중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건이 부결된다.

ㄷ. 총회와 안전 보장 이사회 모두 국제 사법 재판소 재판관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오답 피하기 ㄷ. 안전 보장 이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군사적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이해

(문제 분석) 국제 연합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 의결 기관 A는 총회, B는 국제 사법 재판소, C는 안전 보장 이사회이다.

정답 찾기 ㄴ.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절차 사항이 아닌 실질 사항에 대한 결정은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며, 이때 상임 이사국 중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ㄷ. 국제 관습법은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준거로 활용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ㄱ.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된 사건의 당사자에는 국가와 달리 개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ㄷ. 총회와 안전 보장 이사회는 모두 국제 사법 재판소를 구성하는 재판관을 선출하는 권한을 가진다.



memo



수능 집중 ★고2~N수 권장

구분	수능 입문 >		기출/연습 >	연계 보완 >		고난도 >	모의고사
국어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수능 편 + 워크북		윤혜정의 기출의 나비효과	수능특강 문학 연계 기출	수능특강 사용설명서	하루 3개 1등급 국어독서	FINAL 실전모의고사
영어	윤혜정의 패턴의 나비효과	강의노트 수능개념	수능 기출의 미래	수능연계교재의 VOCA 1800	수능완성 사용설명서	하루 6개 1등급 영어독해	만점마무리 봉투모의고사 시즌1
수학	수능 빌드업	기본서 수능 특강Q	수능특강Q 미니모의고사	수능연계 기출 Vaccine VOCA 2200		수능연계완성 3주 특강	만점마무리 봉투모의고사 시즌2 고난도
한국사 사회	수능특강 Light	eBook 전용	eBook 전용	수능 연계교재 수능특강 수능완성		수능 등급을 올리는 변별 문항 공략	고난도 논스톱 봉투모의고사
과학	수능 스타트	수능완성R 모의고사	수능완성R 모의고사			eBook 전용	수능 직전보강 클리어 모의고사
							eBook 전용 버티컬 모의고사 시즌 1~4

구분	시리즈명	특징	난이도	영역
수능 입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수능 편 + 워크북	개념부터 제대로 꼼꼼히 공부하는 수능 국어 개념	<input type="checkbox"/>	국어
	윤혜정의 패턴의 나비효과	수능 국어의 패턴 연습으로 부족한 약점 보완	<input type="checkbox"/>	국어
	수능 빌드업	개념부터 문항까지 한 권으로 시작하는 수능 특화 기본서	<input type="checkbox"/>	국/수/영
	수능특강 Light	수능 연계교재 학습 전 가볍게 시작하는 수능 도전	<input type="checkbox"/>	영어
	수능 스타트	2028학년도 수능 예시 문항 분석과 문항 연습	<input type="checkbox"/>	국/수/영/사/과
기출/연습	수능개념	EBS 대표 강사들과 함께하는 수능 개념 다지기	<input type="checkbox"/>	전 영역
	윤혜정의 기출의 나비효과	윤혜정 선생님과 함께하는 까다로운 국어 기출 완전 정복	<input type="checkbox"/>	국어
	수능 기출의 미래	올해 수능에 딱 필요한 문항만 선별한 기출문제집	<input type="checkbox"/>	전 영역
연계 + 연계 보완	수능특강Q 미니모의고사	매일 15분 연계교재 우수문항 풀이 미니모의고사	<input type="checkbox"/>	국/수/영/사/과
	수능완성R 모의고사	과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완성 실전편 수록	<input type="checkbox"/>	수학
	수능특강	최신 수능 경향과 기출 유형을 반영한 종합 개념 학습	<input type="checkbox"/>	전 영역
	수능특강 사용설명서	수능 연계교재 수능특강의 국어·영어 지문 분석	<input type="checkbox"/>	국/영
	수능특강 문학 연계 기출	수능특강 수록 작품과 연관된 기출문제 학습	<input type="checkbox"/>	국어
	수능완성	유형·테마 학습 후 실전 모의고사로 문항 연습	<input type="checkbox"/>	전 영역
	수능완성 사용설명서	수능 연계교재 수능완성의 국어 지문 분석	<input type="checkbox"/>	국어
고난도	수능연계교재의 VOCA 1800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의 필수 중요 어휘 1800개 수록	<input type="checkbox"/>	영어
	수능연계 기출 Vaccine VOCA 2200	수능 - EBS 연계와 평가원 최다 빈출 어휘 선별 수록	<input type="checkbox"/>	영어
	하루 N개 1등급 국어독서/영어독해	매일 꾸준한 기출문제 학습으로 완성하는 1등급 실력	<input type="checkbox"/>	국/영
	수능연계완성 3주 특강	단기간에 끝내는 수능 1등급 변별 문항 대비	<input type="checkbox"/>	국/수/영
모의고사	박봄의 사회·문화 표 분석의 패턴	박봄 선생님과 사회·문화 표 분석 문항의 패턴 연습	<input type="checkbox"/>	사회탐구
	수능 등급을 올리는 변별 문항 공략	EBS 선생님이 직접 선별한 고변별 문항 연습	<input type="checkbox"/>	수/영
	FINAL 실전모의고사	EBS 모의고사 중 최다 분량 최다 과목 모의고사	<input type="checkbox"/>	전 영역
	만점마무리 봉투모의고사 시즌1	실제 시험지 형태와 OMR 카드로 실전 연습 모의고사	<input type="checkbox"/>	전 영역
	만점마무리 봉투모의고사 시즌2 고난도	변별력 높은 수능까지 대비하는 실전 연습 모의고사	<input type="checkbox"/>	국/수/영
고난도 논스톱 봉투모의고사	어려운 시험에 익숙해지는 논스톱 훈련 모의고사	<input type="checkbox"/>	국·수·영	
수능 직전보강 클리어 봉투모의고사	수능 직전 성적을 끌어올리는 마지막 모의고사	<input type="checkbox"/>	국/수/영	
버티컬 모의고사 시즌1~4	고난도 문항 다수 수록 eBook 전용 모의고사	<input type="checkbox"/>	국/수/영	